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September vol.117

“잠재성장률의 상승 전환을 뒷받침하고,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할 대한민국 재정의 청사진을 소개합니다.”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September

vol. 117



잠재성장물의 상승 전환을 뒷받침하고,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할 대한민국 재정의 청사진을 소개합니다

정부는 국가 재정의 대전환을 위한 2027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AI·첨단 R&D 등 미래 신성장 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국토대전환과 약자 복지 강화를 통해 모두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나라재정 9월호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민생을 향한 2027년 예산안의 주요 기조와 분야별 재정 배분 방향을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혁신본부 재정정보분석부 | 02-6908-8632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한 | 02-426-6810

재정 NOW

04

재정 칼럼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보여주는 재정 기조

- 김영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2027년도 예산안과 지출구조조정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16

한눈에 보는 2027년 예산안

20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6년 「월간 재정동향」 9월호 기준

24

이달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30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44

재정 캘린더



10



74
이달의 재정경제 도서

76
재정정보원 소식

78
애독자 코너

46
재정제도 이야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그 역사적 연원의 중요성
- 우명동 성신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58
재정이 MONEY
전기가 곧 돈이다, 전력의 경제학
-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62
역사 속의 재정관리 이야기
영조가 만든 『탁지정례(度支定例)』,
긴축재정의 포문을 열다
- 최주희 덕성여대 사학전공 부교수, 역사학자

68
남산 동상, 그 역사 속으로
성재 이시영, 독립운동 자금조달과 배분
- 정경환 동의대 철학과 명예교수, 정치철학



남산 동상 6인,
온라인 추모관 바로가기
위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보여주는 재정 기조¹

김영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
확대와 미래 성장 투자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규모 지출구조조정과
재정 구조개혁



지방 우대와 자율성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들어가며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가 편성의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한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고, 총지출 증가율과 재원 배분 방식 모두에서 이전 중기계획과 뚜렷한 결을 달리한다.

정부는 이를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의 안착이라는 말로 압축해 설명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은 대규모 세수를 성장 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투입하는 동시에, 55년 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글에서는 정부 발표 자료에 나타난 2027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주요 특징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안에 내포된 정책적 함의와 짚어볼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과 그 배경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727조 9천억 원) 대비 12.8% 늘어난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대응기(10.6%)를 웃도는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총수입 역시 880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4%(205조 6천억 원) 증가하는데, 그 대부분은 국세 수입 증가분(194조 2천억 원)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이 국세 수입 증가의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를 꼽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

가 이 증가분의 성격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초과세수분을 162조 3천억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경상적 세입이 아닌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재원’으로 분류했다. 이 초과세수 중 45조 4천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고, 12조 5천억 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나머지 약 104조 4천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 세수 변동성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즉 2027년 예산의 외형적 확장은 상당 부분 반도체 경기에 좌우되는 법인세수 증가라는 특정 산업 사이클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22.8%), 산업·중소기업·에너지(29.7%), 문화·체육·관광(20.4%) 분야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며, 보건·복지·고용(9.3%)과 국방(8.2%)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분야도 고르게 늘었다.

반면 SOC(4.0%)와 환경(5.2%)은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작아, 이번 예산이 전통적 인프라보다 인적자본·산업 전환·지역 재정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개선되는 지표, 유지되는 조건

정부가 특히 강조하는 대목은 재정건전성 지표의 개선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본예산 기준 △3.9%에서 2027년 △0.1%로 3.8%포인트 개선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1 본 칼럼은 기획예산처가 2026년 9월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2027년도 예산안 브리핑문」, 「2027년도 예산안 홍보자료」,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중기적으로도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Delta 3.0\%$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 2025~2029년 계획이 예정했던 2030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 개선세를 해석할 때 몇 가지는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비율 지표의 개선은 분모인 명목 GDP의 큰 폭 증가(국세 수입 급증에 상응하는 경상성장을 반영)에 힘입은 바가 크며,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 자체는 2026년(추경 기준) 1,412조 8천억 원에서 2030년 1,734조 1천억 원으로 계속 늘어난다. 즉 국가채무 비율 하락과 국가채무 총액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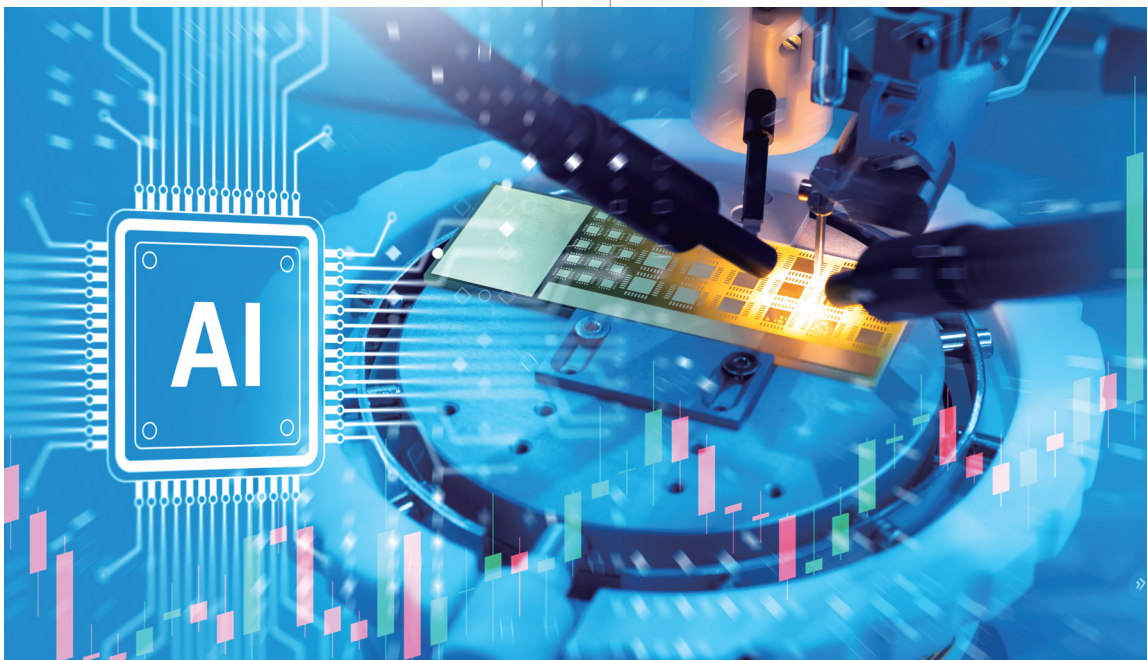
둘째, 중기 재정지출 계획상 2027년의 12.8%라는 총지출 증가율은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점차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어, 2027년

의 확장 기조가 이후에도 같은 속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조세부담률은 2026년 17~18%대에서 2027년 이후 22%대로, 국민부담률은 24~25%에서 29%대로 뛰어오르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국세 수입이 예상대로 들어온다는 전제 위에 있는 수치다. 결국, 이번 계획이 제시하는 건전성 개선 경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세수 호조가 중기적으로 지속된다는 가정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3.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기대와 우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이다. 정부는 이를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설명한다. 운용 방식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초과세수분을 매년 산정해 이 기금에 적립



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계정으로 나눠 투자하는 구조다.

각 계정은 자본축적(New-Capital), 과감한 투자(Enterprising), 탄력적 집행(fleXible), 시급성(Timely)이라는 이른바 ‘NEXT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해 재원을 배정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 이 기금의 특징은 단년도 세계잉여금 처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기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을 통해 다년도에 걸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가 급증할 때 이를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성장 잠재력 확충에 쓰고, 반대로 세수가 부족해질 때는 여유자금으로 재정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실제로 총 여유자금 규모는 약 104조 4천억 원에 달해, 재정 변동성 관리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동시에 이런 방식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도 안고 있다. 초과세수 여부를 가르는 기준(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은 매년 세수 실적에 따라 소급 변동할 수 있는 산식이어서 예측 가능성 확보가 과제로 남고, 대규모 재원이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 형태로 운용되면 국회의 예산 심의·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재정학계에서 통상 제기되는 논점이다.

정부가 함께 발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 계정,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신규 특별회계·기금(기금 67개→69개, 특별회계 21개→22개) 역시 특정 국정과제 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이지만, 재정체계의 파편화 가능성과 관리 부담 증가라는 측면도 함께 따져볼 사안이다.

4. 고강도 지출구조조정과 의무지출 개혁

정부는 세입 확대와 함께 지출 측면의 구조조정도 역대급 규모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재량지출에서는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며 38조 6천억 원을 절감해 목표치인 15% 감축을 달성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간 지출구조조정 실적(128조 원~26.9조 원)과 비교해도 가장 큰 규모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의무지출 분야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를 개편해 69조 원을 줄였다고 밝혔는데, 그중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이다. 1971년 도입돼 55년간 유지된 이 제도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교육 재정에 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전환됐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수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 교육 재정이 실제 수요와 괴리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개편이기도 해, 시행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 교육재정 총량의 실질적 변화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구직급여 역시 무급휴일 지급을 주 7일에서 6일 지급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편해 1조 4천억 원을 절감하고, 이를 저출생 대응 재원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혼인·출산세액공제, 대중교통 소득공제,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 등 17개 조세지출 사업(1조 9천억 원 규모)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저소득층 등 실질적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한 점도 눈에 띈다. 조세지출의 재정 전환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되지만, 세액공제 방식보다 재정사업 방식이 매년 예산 심

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가능성은 국회 심의 결과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도 함께 짚어둘 만하다.

5. 지방 우대와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이번 예산안은 지방 재정에 대한 배려를 뚜렷한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 우대원칙을 적용하는 사업을 기존 7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리고, 국비 보조율 인상·자부담 인하·훈련수당 차등 지급 등의 방식으로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예컨대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의 국비 보조율은 수도권 80%에서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은 90%로 높아지고, K-청년 뉴딜 아카데미 훈련수당은 수도권 30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으로 차등화됐다. 지방국립대 30개교에 대해서는 의·치·약·수의대를 제외한 무상교육이 도입된다. 5급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권) 구상을 뒷받침하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초광역 계정(2조 8천억 원)이 신설되고, 지방정부가 자율 편성하는 포괄 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에서 11조 9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연간 최대 5조 원(미래대응기금 3조 5천억 원, 반도체특별회계 1조 5천억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가 배정됐다. 이런 조치들은 지방소멸 대응과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국정과제와 재정 배분을 직접 연계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에도 유사한 재정 유인 설계가 적용될 수 있는 선례로 볼 수 있다.

6. 중기(2026~2030년) 재정운용계획이

예고하는 경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6~2030년 재정수입이 연평균 9.9%, 그중 국세 수입이 연평균 1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지난 계획 대비 부처 요구액 기준으로도 2027~2029년 사이 매년 80조~128조 원씩 계획 대비 재정투자 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이를 '2025~2029년 계획 대비 40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 규모 확대'로 설명한다. 총지출 증가율은 2027년 12.8%로 정점을 찍은 뒤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점진적으로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으며, 의무지출은 연평균 8.5%, 재량지출은 연평균 8.3% 증가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러한 중기 경로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하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대외 여건의 호조를 활용해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AIDC·피지컬AI)와 AI 등 성장동력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적극적 재정운용 의지이며, 다른 하나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압력, 이자지출 부담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계획이다.

정부 스스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연금·의료 등 복지 소요 확대, 이자지출 부담 등 의무지출 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어, 중기적으로 재정 운용의 여력이 계속 낙관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는 반도체를 포함한 세계 경제 여건, 미국의 관세 정책,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에 상당 부분 좌우될 수 있음을 계획 문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맺음말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외형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개선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조합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 그릇



에 담아 생산적으로 투자하고, 동시에 의무지출 구조개혁과 역대급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55년 만의 교육교부금 개편, 조세지출의 재정 전환, 지방 우대원칙의 전면 확대, 국정성과 연계형 특별회계·기금 신설 등은 개별적으로도 상당한 제도 변화를 수반하는 조치들이다.

이러한 재정 기초의 성패는 결국, 두 가지 조건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국세 수입 전망의 현실화 여부다. 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교역 여건이 계획대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초과세수를 전제로 설계된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규모와 재정수지 개선 경로 모두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다른 하나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의 운용 성과다. 미래대응기금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가능성, 교육교부금 개편이 지방 교육 현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지분투자형

R&D와 조세지출 전환 사업들의 성과 환류 여부 등은 앞으로 몇 년간의 집행 과정에서 검증돼야 할 과제다. 2027년도 예산안은 그 자체로 완결된 정책이라기보다, 향후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

2027년도 예산안과 지출구조조정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상·통계학부 교수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확대와 지출우선순위
재정립



성과평가에 기반한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미래 성장 분야로
재원 재배분



성과평가와 예산편성의
연계 강화



재정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의 변화'

2027년 예산안은 겉으로만 보면 강한 확장재정이다.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2.8% 늘어난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정부가 다시 재정을 크게 확대했다는 평가가 먼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지출 총액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새로운 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사업을 대폭 정리하고, 그 재원을 성장과 미래 대응 분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재정의 크기만이 아니라 재정의 구성을 얼마나 바꾸려 했느냐이다.

재정사업은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쉽지 않다. 사업이 시작되면 수혜자와 이해관계자가 생기고, 담당 조직과 예산 항목도 함께 고착된다. 정책 성과가 낮아져도 폐지보다는 축소가 쉽고, 축소보다는 현상 유지가 더 쉽다.

이런 관성이 누적되면 새로운 정책 수요가 생길 때마다 기존 사업 위에 새 사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전체 예산은 커지지만 정작 필요한 곳으로 돈을 옮길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27년 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은 눈에 띈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38조6천억 원을 절감하고, 전체 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했다. 동시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경직적인 지출구조에도 손을 댔다. 단순한 삭감이라기보다 과거에 정해진 지출의 우선순위를 다시 평가하고, 그 재원을 새로운 정책 분야로 옮기려는 시도다.

지출구조조정의 의미는 정부가 돈을 적게 쓰는 데 있지 않다.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맞춰 돈을 다시 배분하는 데 있다. 인구구조가 달라지

고 산업의 중심이 AI와 첨단기술로 이동하는데도 10년 전, 20년 전에 만들어진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자체가 재정의 비효율일 수 있다. 구조조정은 과거의 우선순위를 현재와 미래의 우선순위로 교체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호황기의 세수, 미래를 위한 재원으로

이번 예산안에서 이런 재배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세수 증가가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국세 수입은 584조4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총수입은 880조8천억 원에 이른다.

총지출을 크게 늘리고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0.1% 수준으로 축소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8.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은 크게 늘지만, 재정지표는 오히려 개선되는 구조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재정운용은 더 신중해야 한다. 반도체처럼 경기변동이 큰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 증가를 모두 반복적인 지출로 전환하면 업황이 꺾였을 때 문제가 생긴다. 세수는 줄어도 한번 만들어진 지출은 쉽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모두 소비하기보다 일부는 미래 투자에 쓰고, 일부는 재정의 완충장치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그런 문제를 의식한 장치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 162조3천억 원을 활용해 그중 45조4천억 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세입이 좋은 시기의 재원을 전부 당장 소진하지 않고 일부는 장기적인 투자와 세수 변동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을 다시 보다

지출구조조정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몇 조원을 줄였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어떤 사업을 왜 줄일 것인지, 어떤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026년 처음 전면 실시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이번 구조조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다.

과거에는 각 부처가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을 스스로 평가했다. 이 구조에서는 평가가 관대해질 가능성이 높았고, 결과가 실제 예산편성과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됐다. 최근 5년간 미흡사업 비율도 15~16% 수준에서 거의 고착됐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재정당국과 외부 전문가가 전 부처 사업을 직접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요구와 연결하는 통합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통합평가는 2,487개 사업, 185조4천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단순히 집행률을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 사업에 국가재정을 계속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사업계획은 적정인가, 집행은 효율적인가, 실제 성과를 만들어냈는가이다.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할 수 있는지, 다른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는지, 정책목표와 사업내용이 맞는지, 실제 성과가 근거자료로 확인되는지도 함께 봤다.

결과는 이전보다 훨씬 엄격했다. 2,487개 사업 가운데 858개가 감액, 40개가 통합, 3개가 폐지 판정을 받았다. 이들을 합하면 901개 사업, 전체의 36.2%가 지출구조조정 대상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규모는 55조1천억 원, 절감 예상액은 약 7조7천억 원이다. 과거 자율평가에서 최근 5년간 미흡 판정 비중이 평균 15.8%였던

것과 비교하면 평가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따진 구조조정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개별 사례에서 드러나는 판단의 기준이다. 공무원 통근버스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1978년부터 정부청사 공무원의 출퇴근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서울과 과천은 이미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 그런데도 서울과 과천을 포함한 수도권 노선이 계속 운영됐고, 최근 3년간 예산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반복 편성됐다.

평가단은 1978년에 사업을 시작하게 만든 조건이 지금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결국 수도권 노선은 폐지하고, 세종 등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장애공무원 지원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도록 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사업이 오래됐다는 사실 자체가 폐지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게 만든 환경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다시 묻는 데 있다. 지출구조조정은 단순히 오래된 사업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정책의 전제가 지금도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례는 조금 다르다. 금연정책의 필요성 자체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12개의 내역사업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대상과 기능이 서로 겹치고, 일부 사업의 이용률과 집행실적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평가단은 금연정책을 축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업을 다시 정리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단순한 이용률을 성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 사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가입자의 납

입과 정부기여금 지급 사이의 시차 때문에 내부에 유보금과 이월금이 계속 쌓였다. 2025년 교부예산현액 6,660억 원 가운데 집행액은 4,111억 원이었고, 2,549억 원이 남았다.

통합평가는 사업을 없애기보다 실제 집행에 필요한 만큼 예산 규모를 다시 계산하고, 절감한 재원을 저소득 청년의 가입 유지율을 높이는 데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 사례는 지출구조조정이 정책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정책목표가 타당하더라도 필요한 예산보다 많은 돈이 배정돼 있다면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필요한 예산이 무한정 커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사업 자체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정도 있었다. 3D 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됐지만 사업의 중심이 제조혁신 실증, 솔루션 개발, 사업화 등 민간 적용 단계로 이동했고, 산업부·중기부·지자체·테크노파크 등에도 유사한 지원사업이 다수 존재했다. 평가단은 안전교육, 실태조사, 정보 제공 등 정부가 계속 담당할 기능은 다른 사업으로 이관하되, 산업 확산 지원은 민간이나 다른 부처 사업으로 넘기도록 하고 해당 사업은 폐지했다.

이처럼 재정평가는 단순히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가르는 작업이 아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만든 조건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성과지표가 제대로 설계돼 있는지, 집행되지 못한 돈이 내부에 쌓여 있지는 않은지, 유사한 기능을 여러 부처가 나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따지는 과정이다. 통합평가 사례를 보면 목적의 시효, 잘못된 성과지표, 잔류재원, 성과 입증보다 빠른 예산 확대, 기능의 중복이라는 몇 가지 반복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구조조정을 상시적인 재정 운용으로

이런 평가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출구조조정을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상시적인 재정 운용 방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을 줄여야 할 때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를 삭감하는 방식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필요한 사업도 같이 줄어들 수 있고, 부처는 겉으로 예산을 줄인 뒤 다른 항목에서 다시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에 근거해 구조를 조정해야 하는 이유다.

2027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도 중요하다. 가장 뚜렷한 방향은 성장잠재력 제고다. 반도체, 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관련 투자는 10조8천억 원에서 21조3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반도체 생산거점과 원천기술, 전력·용수·산업단지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해 GPU 1만장과 데이터·인재를 지원한다. 핵융합, 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이런 지출은 단기 경기부양과는 성격이 다르다. 소비를 늘려 당장의 총수요를 자극하는 재정이 되기보다 기술, 인프라, 인적자본에 투자해 공급 능력을 높이려는 재정에 가깝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한국 경제에서는 노동 투입을 계속 늘리기 어렵다.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과 자본의 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청년 지원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2027년 청년정책은 인재양성, 취업 경험, 직업훈련, 창업, 자산형성, 주거, 혼인·출산을 하나의 생애주기 안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첨단산업 부트 캠프를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인턴 학기 기회를 제공하며, 주거와 자산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로 보기보다 미래의 생산 주체로 본다면 이런 지출은 인적자본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신규 지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확대하는 AI, 청년, 지방 사업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한다. AI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성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비효율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특정 기업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보조금 경쟁으로 흘러가거나, 비슷한 청년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중복된다면 몇 년 뒤에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재정평가의 진짜 의미가 있다.

구조조정은 과거 사업에만 적용하고 새로운 국정과제에는 예외를 두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업은 처음에는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 필요성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되는지를 다시 묻는 장치가 부족했다는 데 있다. 신규사업을 만들 때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어떤 성과를 달성해야 계속 지원할 것인지, 민간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 언제 정부가 빠질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통합평가도 아직 완성된 제도는 아니다. 첫해에는 구조조정 대상 비중이 36.2%에 달했지만 분야별로 보면 25%에서 50%까지 상당한 차이가 났다.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에 일률적으로 15% 이상 감액을 요구하는 방식도 사업별 문제의 크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안전이나 복지처럼 단순 감액이 해답이 되기 어려운 분야도 있다.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감액률의 정교화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방향은 분명하다. 재정사업 평가는 더 이상 예산편성과 분리된 사후적 성

적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통합평가는 감액 사업에는 차년도 예산요구 때 15% 이상 감액하도록 하고, 폐지 사업은 예산요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통합 사업은 다른 사업과 합쳐서 요구하도록 했다. 반대로 우수사업에는 평가유예와 증액 권고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평가와 예산을 직접 연결해야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의무지출 개혁도 피할 수 없다. 재량지출만 줄이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계속되면 연금, 건강, 복지, 지방이전 등 경직적인 지출의 비중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교부금 연동구조 개편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생 수와 교육수요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계속 적정하지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출구조조정을 작은 정부와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정부지출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재정의 효과다. 민간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사업, 정책목표가 사라진 사업, 유사 기능이 중복된 사업은 줄이는 것이 맞다.

반대로 AI 인프라, 기초기술, 재난안전, 인력양성처럼 외부효과가 크고 민간이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분야에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

필요한 곳에 더 쓰는 재정으로

그런 의미에서 확장재정과 지출구조조정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가야 한다. 구조조정 없는 확장은 기존 지출의 관성 위에 신규사업만 쌓아갈 위험이 있다. 반대로 미래투자 없는 구조조정은 단순한 긴축에 그칠 수 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는 재원을 과감히 투

입하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성과가 낮은 기존 지출은 계속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심의에서도 이 원칙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이 지역 요구나 이해관계자의 압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규사업만 추가된다면 재정 재배치의 취지는 사라진다. 반대로 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 규모가 단순한 집행 잔액이나 자연감소분을 포함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 얼마나 많이 줄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왜 줄였는지를 따져야 한다.

결국 2027년 예산안을 평가하는 기준은 820조 9천억 원이라는 총액 하나가 될 수 없다. 38조 6천억 원의 지출구조조정이 실제로 성과가 낮거나 시대적 필요성이 줄어든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는지, 그렇게 확보한 재원이 AI, 인적자본, 지역경제 등 더 높은 사회적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분야로 이동했는지가 중요하다.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보여준 것도 바로 이것이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규모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한때 필요했던 사업이라도 환경이 달라지면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성과가 확인되는 사업에는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할 수도 있어야 한다.

좋은 예산은 많이 쓰는 예산도, 무조건 적게 쓰는 예산도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 재정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능력 못지않게 오래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능력, 성과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원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2027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도 바로 여기에 있다. 12.8%라는 큰 폭의 지출 증가 속에서도 기존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정의 방

향을 바꾸려 했다는 점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작업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다. 평가와 예산편성을 연결하고, 신규사업도 언젠가는 다시 평가받도록 하며, 성과가 낮은 지출은 상시적으로 정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큰 재정도, 작은 재정도 아니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쓰고, 필요성이 줄어든 곳에서는 과감하게 거둘 수 있는 재정이 다. 2027년의 지출구조조정과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그런 재정 운용 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 이번 예산안의 의미는 단순한 820조 원의 확장재정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한눈에 보는 2027년 예산안

기본 방향

01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을 제고를 위한 담대한 투자

02 성장 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통한 K자형 양극화 완화

재정 총량

총수입

2027년 **880.8조 원**



2026년 예산 **675.2조 원** ↑ **205.6조 원**
30.4% 증가

총수입

총수입 구성

880.8조 원



국세수입
584.4조 원
(66.3%)

세외수입
296.4조 원
(33.7%)

총지출

2027년 **820.9조 원**



2026년 예산 **727.9조 원** ↑ **93.0조 원**
12.8% 증가

총지출

총지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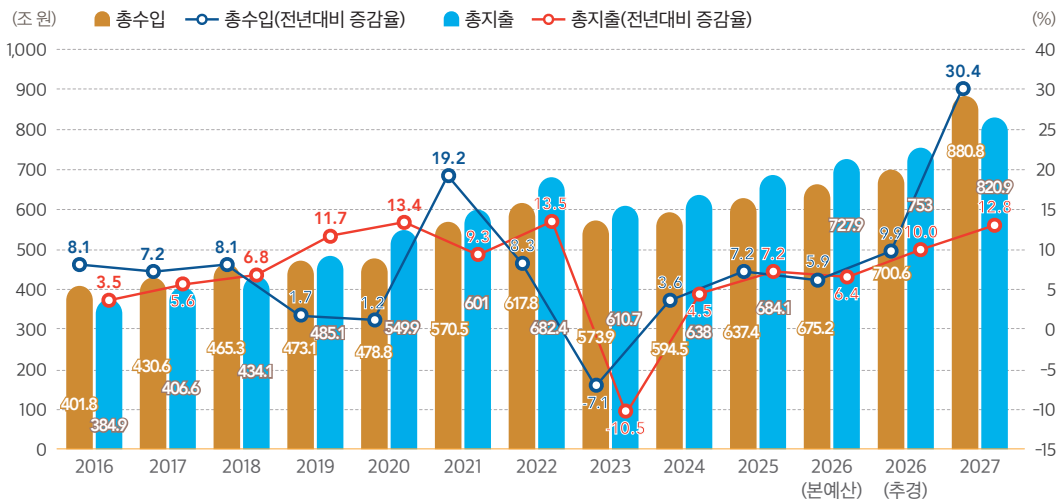
820.9조 원



예산
505.0조 원
(61.5%)

기금
315.8조 원
(38.5%)

총수입·총지출 추이



주 2025년까지 결산, 2026년은 본예산 및 추경, 2027년은 예산안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59.9조 원(GDP 대비 1.9%)

전년 대비 3.8%p 개선

관리재정수지

3.1조 원(GDP 대비 $\Delta 0.1\%$)

전년 대비 3.8%p 개선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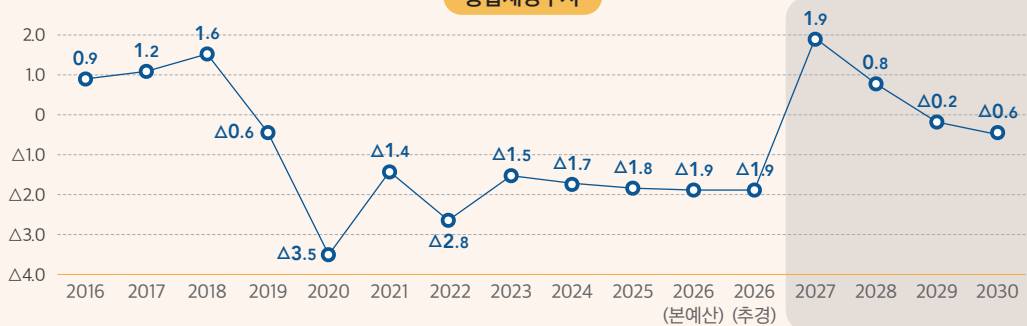
1,519.8조 원(GDP 대비 48.3%)

전년 대비 3.3%p 감소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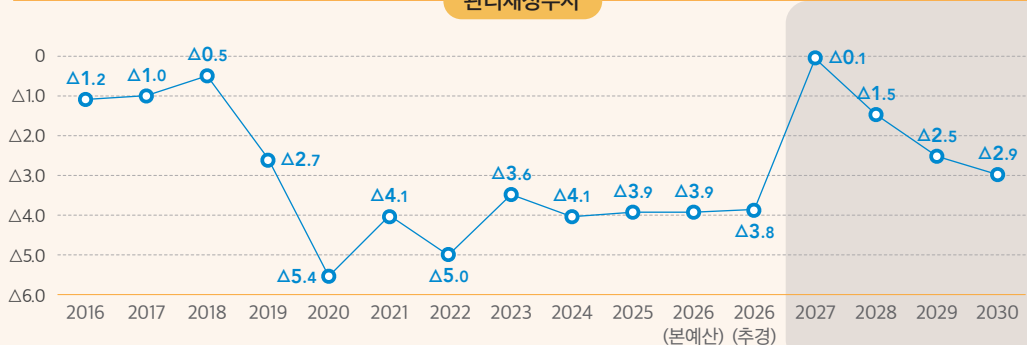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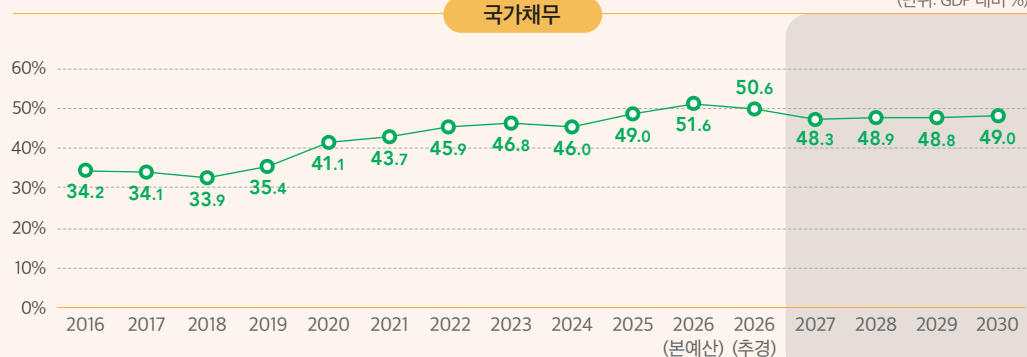
관리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국가채무

(단위: GDP 대비 %)



주 2025년까지 결산, 2026년은 본예산 및 추경 기준, 2027년 이후는 중기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자원배분 및 중점투자 방향

투자중점

1. 3대 메가프로젝트 + AI 총력 지원

(10.8조 원 → 21.3조 원, +97.2%)

- K-반도체 강국, 초격차 지속
- 디지털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 AIDC 산업생태계 조성
- 전력·용수·산단 인프라 전폭 지원
- 프론티어급 AI모델 구축, 모두의 AI



2. 미래 성장엔진 확충

(51.2조 원 → 62.8조 원, +2.7%)

- 포스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육성
- 에너지 대전환
- 모두의 창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 높은 문화의 힘, 문화강국 도약
- 중소기업 성장·도약·수출 지원



3.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28.2조 원 → 43.3조 원, +53.5%)

- (교육) 첨단인재 양성, AI 역량 강화
- (일자리) 일경험·훈련 등 72만개 지원
- (자산)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 (주거) 청년 선호 주택 10.6만호 공급
- (혼인·출산·양육) 복지급여 통합·확대
- (생활·문화)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4.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85.7조 원 → 117.1조 원, +36.6%)

- 국토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
-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민생안정
- 일상을 지키는 적극복지
-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5. 국민 안전·평화

(30.7조 원 → 38.3조 원, +24.8%)

-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자주국방 실현
-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 국익 최우선의 실용 외교
-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확립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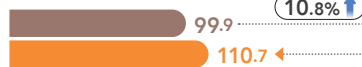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 2026년 본예산 ■ 2027년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



분야별 투자 방향

보건·복지·고용

289.0조 원



- 양극화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 강화
- 출산율 반등 지속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단계별 지원 확대
- 5급3특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

11.6조 원



- 기초예술 지원강화 및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
-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을 살리는 메가관광권 전략적 투자
-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여 문화예술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지원을 통한 스포츠 경쟁력 강화

R&D

39.5조 원



- 미래 성장주도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기술투자 확대
- 투자형 R&D 신규 도입, 지역 R&D 확대 등 R&D 혁신 추진
- 출연연 전략연구, 신진연구자 등 연구현장 핵심역량 지원 강화



SOC

28.9조 원



- 지역 균형성장,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한 핵심 인프라 투자 확대
- 미래 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대중교통비 절감부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일터·보금자리 화재 안전까지 촘촘한 민생지원

국방

73.3조 원



- 자주국방 역량 강화로 우리군 주도의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구축
- 현역 가용자원 부족에 대비한 군구조 개편 및 스마트 강군 육성 적극 추진



공공질서·안전

28.8조 원



-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뒷받침
- 재난예방 인프라 확충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응체계 고도화



교육

110.7조 원



- 초·중등교육의 안정적 투자기반 유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도 균형있게 확대
-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AI·첨단산업 실무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청년의 성장기회 확대
-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국민 생애주기별 교육기회 보장

환경

14.6조 원



- 전기차 물량 대폭 확대 등 무공해차 보급 촉진
- 녹색금융, 온실가스 감축실비 도입 보조 등 탈탄소 전환 지원
- 기후재난 대응 및 환경피해 배상 등 환경 안전 강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41.2조 원



- 제조AX 가속화 및 반도체, 피지컬AI 등 첨단산업 집중 육성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
- 5급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통한 지역주도 성장 촉진
- 핵심자원의 비축·재자원화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해 창업도전·기업성장 기반 대폭 확충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경쟁력 강화 지원

농림·수산·식품

30.7조 원



- 농어촌 기본소득, 인프라 확충 등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 규모화·AX를 통한 농어업의 근본적인 구조개편 및 경쟁력 제고
- 소비자-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농축수산물 유통·수급 정상화
- 기후·통상위기 등에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외교·통일

7.1조 원



- 전략적 ODA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문화 영토 확장
- 재외 거점공관을 통한 기업 해외시장개척 및 국민보호기능 강화
- 국민의 대북·통일 인식 및 정책참여 역량 제고



일반·지방행정

149.0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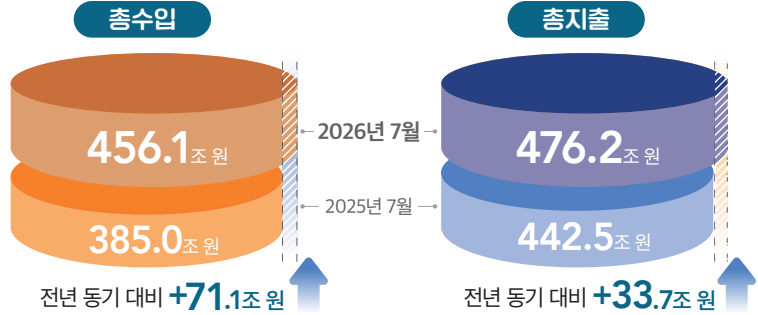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발전 및 사회연대경제 성장 뒷받침
-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및 포용적 정책금융 지원 확대



재정동향

2026년 「월간 재정동향」 9월호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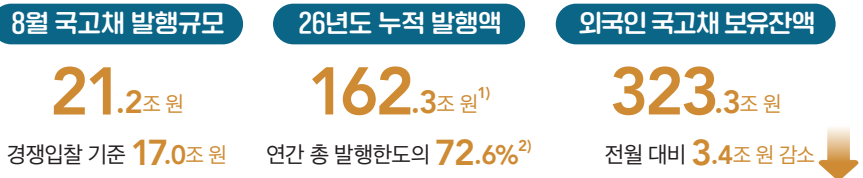
국가채무



- 주 1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7월 말 잠정 기준
 2 중앙정부 채무 기준
 3 구성항목별 수치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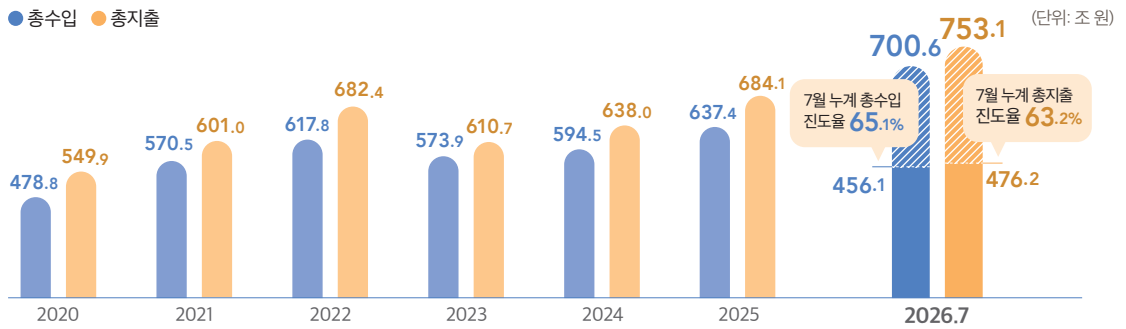
국고채



- 주 1 개인투자용 국채 12조 원 포함시 163.6조 원
 2 2026년도 본예산 국고채 발행한도액 225.7조 원 중 개인투자용 국채 2.0조 원 제외 기준
 3 국채시장 항목은 9월호 수록 기준 2026년 8월 자료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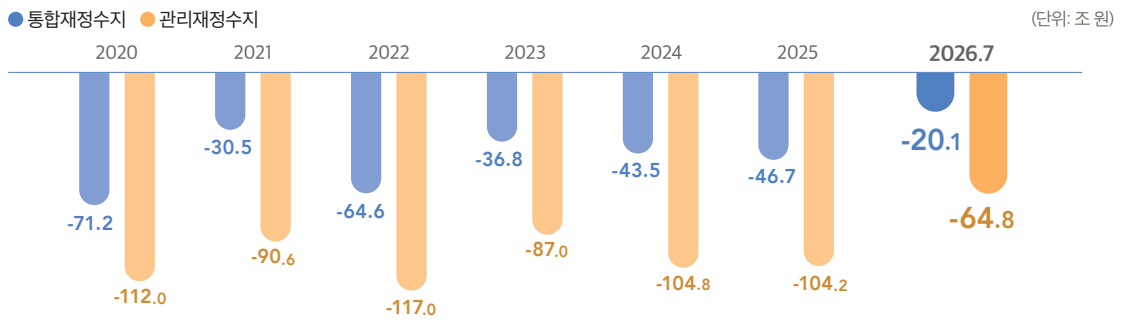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9.

● 총수입 ●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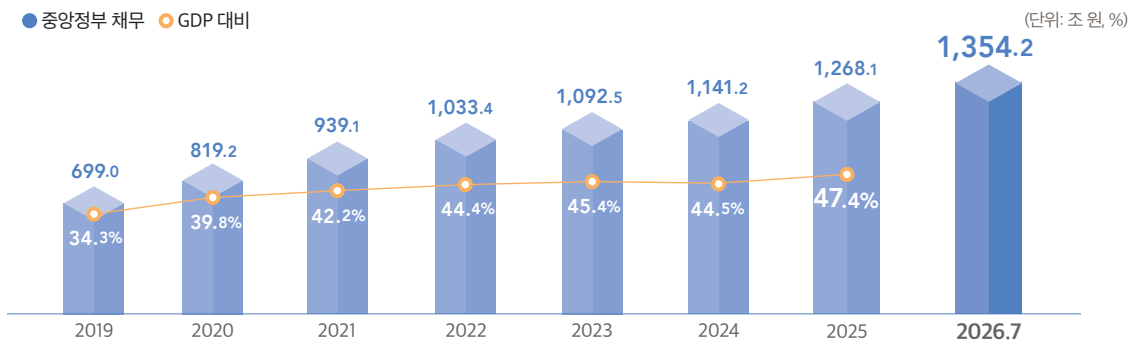
※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7월 말 잠정 기준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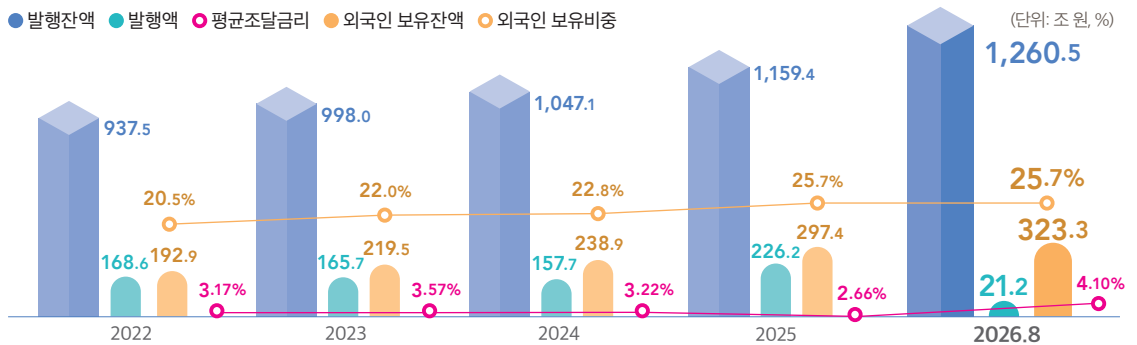


※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7월 말 잠정 기준

● 중앙정부 채무 ●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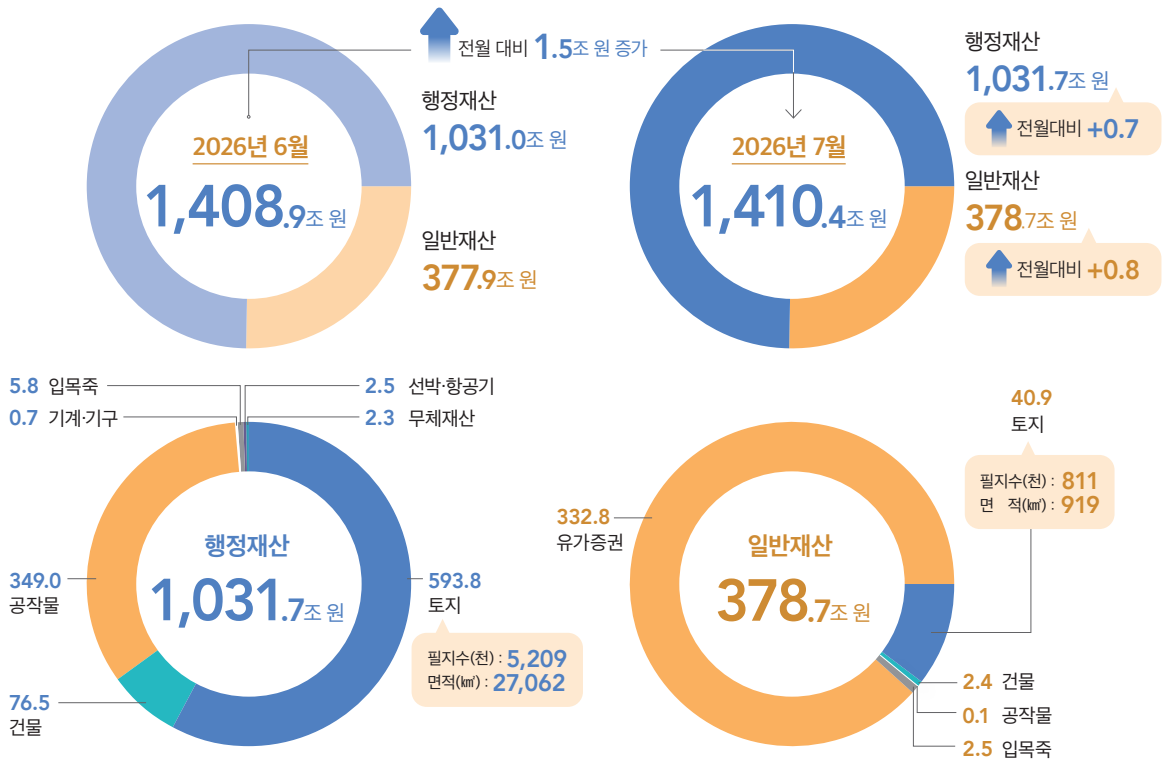


● 발행잔액 ● 발행액 ● 평균조달금리 ● 외국인 보유잔액 ● 외국인 보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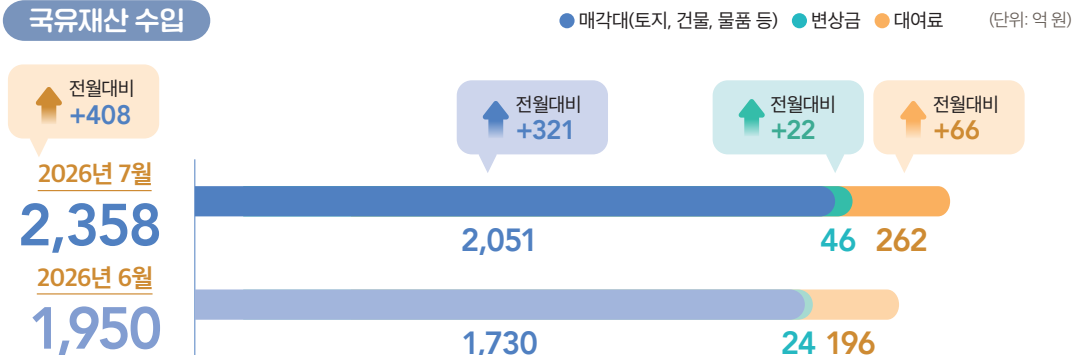
국유재산

국유재산 현황



- 주 1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2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예시: 창·관사, 도로, 하천 등)
 3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9.

국유재산 수입



- 주 1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2 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입목죽, 무형자산, 내용연수 1년 이상의 완성재, 양곡, 원자재, 유동자산 등 매각 수입
 3 변상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에 수납한 변상금
 4 대여료: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9.

정부출자

정부출자금

2026년 7월 말

197 조 7,382 억 원

전월 대비
2,424 억 원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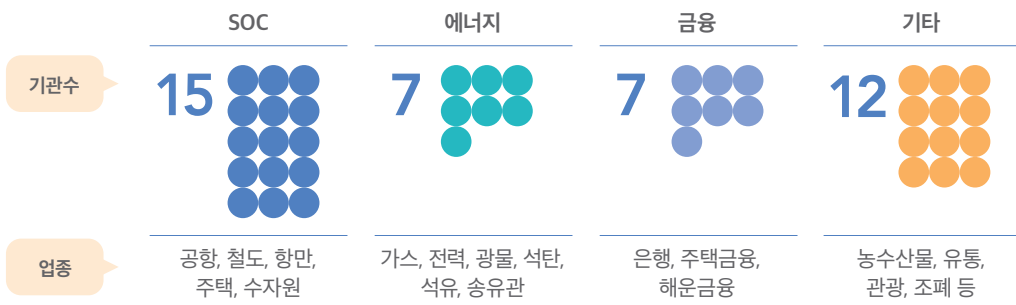
2026년 6월 말

197 조 4,958 억 원

대상기관

SOC, 에너지, 금융 등 공공업무 수행 41개 기관

(단위: 개)



출자금 세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외 ● 미지정

(단위: 억 원)

2026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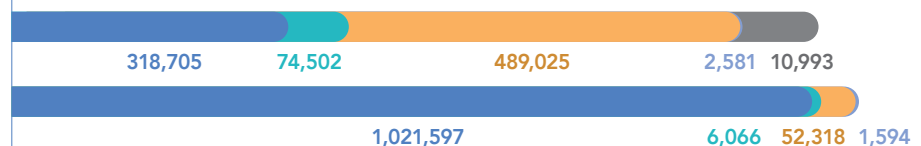
197 조 7,382 억 원

일반회계

895,807 억 원

특별회계·기금

1,081,575 억 원



202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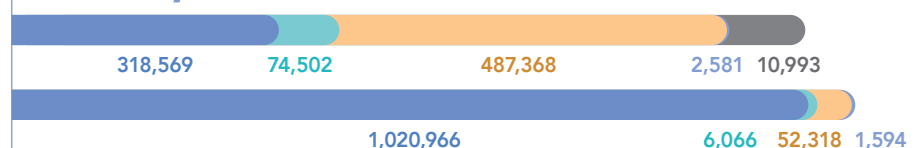
197 조 4,958 억 원

일반회계

894,014 억 원

특별회계·기금

1,080,944 억 원



주 2026년 6월 신규 설립된 한미전략투자공사 공공기관 미지정 상태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9.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9월호에서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성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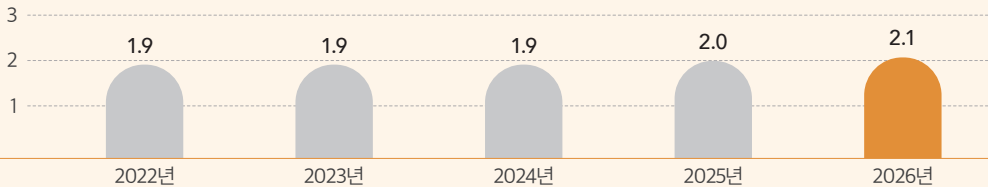
국세청

임무: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국세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며,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비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청

총지출 추이

(단위: 조 원)



주 2025년까지 결산, 2026년은 본예산 기준

총지출 2.1조 원 중 성과관리 대상 0.2조 원(11.6%)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억 원, 개)

구분	내용	2026년 예산	비중	성과 지표수
전략목표 I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성실신고기반을 확충한다	145	6.0%	2
전략목표 II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능동적 탈세행위를 엄단한다	981	40.4%	2
전략목표 III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선진납세풍토를 조성한다	149	6.1%	2
전략목표 IV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세정을 운영한다	1,057	43.6%	1
전략목표 V	책임운영을 통해 납세자에게 편하고 전문적인 국세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95	3.9%	1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지표 성격



국세청

우수 프로그램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소개

*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환류하기 위해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선정사유, 개선방향 및 환류계획을 분석하여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1 탈세 대응 강화

프로그램 목표 고의적 지능적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선정 사유 성과달성도, 예산집행, 성과 우수성,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프로그램의 목표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주요 추진 전략

부과 징수자료
수집비

조사활동지원

확정채무 지급

소송수행비용

FIU정보통합
분석시스템
(FOCAS)운영
(정보화)



프로그램 예산규모 (2026년 예산)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2025년 실적치	달성률
819억 원	조세법칙 처분율	89.2%	93.2%	104.5%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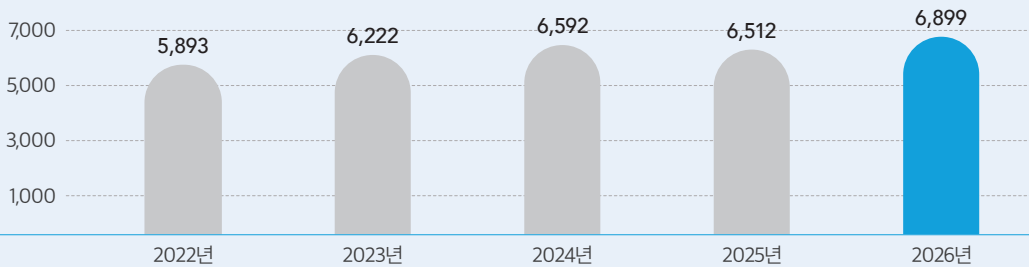
관세청

임무: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비전: AI(인공지능)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총지출 추이

(단위: 억 원)



주 2025년까지 결산, 2026년은 본예산 기준

총지출 6,899억 원 중 성과관리대상 1,632억 원(23.7%)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억 원, 개)

구분	내용	2026년 예산	비중	성과 지표수
전략목표 I	국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519	31.8%	2
전략목표 II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환경 구현을 위해 협력과 단속을 조화롭게 운영한다	48	2.9%	1
전략목표 III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경제범죄를 엄단한다	51	3.1%	1
전략목표 IV	미래 관세행정을 선도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1,015	62.2%	2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지표 성격



관세청

우수 프로그램

1 관세 심사

프로그램 목표 성실한 납세신고를 확산하기 위해 납세협력을 확대하고 불성실 탈세행위 등에 엄정 대응한다

선정 사유 기업 지원과 엄정한 과세권 행사라는 상충하기 쉬운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킨 모범 사례

주요 추진 전략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법규준수도 제고 및 성실신고 유도

기업의 자발적 법규 준수 및 성실납세 환경 조성

집중 단속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단속활동 전개

국제 기준을 선도하고 안전사회 구현



프로그램 예산규모 (2026년 예산)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2025년 실적치	달성률
48억 원	관세조사 적정 수행률	102.0%	117.0%	1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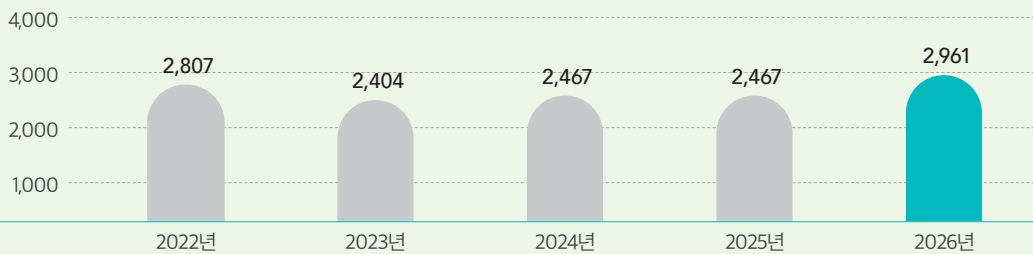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조달청

임무: 공공행정에 필요한 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달·관리함으로써 고객에게 최고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비전: 세계최고의 공공부문 물적 자원 조달·관리 전문기관

총지출 추이

(단위: 억 원)



주 2025년까지 결산, 2026년은 본예산 기준

총지출 2,961억 원 중 성과관리대상 1,674억 원(56.5%)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억 원, 개)

구분	내용	2026년 예산	비중	성과 지표수
전략목표 1	공공부문 물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조달하여 원활한 정부기능 수행을 지원한다	1,674	100.0%	3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지표 성격



조달청

우수 프로그램

1 조달사업 운영

프로그램 목표

정부 정책지원을 위해 물품·용역·시설 등 조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정부조달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선정 사유

혁신제품 매출액은 목표 초과달성하여 성과 달성도가 매우 우수하고, 나라장터쇼핑몰 등록기업 판매실적은 정부 건전재정 기조 및 실적 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 조달시장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

주요 추진 전략

조달기업 해외 진출 영역 확대 및 수출확대

조달기업 성장 지원을 강화

혁신제품 생태계 확장 및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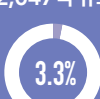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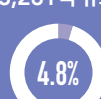
조달사업의 공정성 강화 및 품질 향상



프로그램 예산규모 (2026년 예산)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2025년 실적치	달성률
1,210억 원	혁신제품 매출액	10,000억 원	10,447억 원	104.5%
	나라장터쇼핑몰 매출액	26.6조 원	25.6조 원	96.2%



주요국 월간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수지
미국 7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0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조 4,854억 달러  3.2%	6조 2,842억 달러  5.2%	1조 7,988억 달러 적자  총수입 총지출
독일 7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7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73억 유로  Δ2.5%	2,893억 유로  4.4%	520억 유로 적자  총수입 총지출
일본 6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3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조 3,439억 엔  Δ50.1%	39조 473억 엔  6.9%	33조 7,034억 엔 적자  총수입 총지출
프랑스 7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7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47억 유로  3.3%	3,281억 유로  4.8%	1,234억 유로 적자  총수입 총지출
영국 7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4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728억 파운드  6.5%	4,433억 파운드  5.2%	705억 파운드 적자  총수입 총지출

자료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July 2026 (2026.8.31.)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July 2026 (2026.8.20.)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2026년 6월) (2026.8.20.), 일반회계 기준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1 juillet 2026 (2026.9.2.),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준

영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July 2026 (2026.8.21.), 중앙정부 총경상수입-총지출 및 순차입 기준

대한민국 7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7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56.1조 원  18.5%	476.2조 원  7.6%	20.1조 원 적자  총수입 총지출
------------------------	--------------------	---------------------	---	--	---

자료 한국)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9.

해외재정동향 (9월)

주요국 이슈

01 미국

- 공공부채 40조 달러로 역사상 최고점 도달
- 재무부, 장기국채 바이백(Buyback) 규모 두 배 이상 확대
- 임시예산 확정으로 연방정부 첫다운 일시 회피

04 영국

- ONS, 공공부문 재정동향 발표, 공공부문 지출 증가에 따른 순차입금 확대
- 정부 발행 국채(Gilt) 금리 5.89%로 급등: 28년 중 최고치 기록

02 독일

- 독일, 월간 보고서에서 상반기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물류 리스크는 경고
- 독일 연방통계청, 2분기 GDP 성장을 확정치 +0.3% 발표
- 킬 세계경제연구소, 2026년 독일 성장률 전망치 대폭 상향 조정

05 일본

- 내각부, 8월 경제 동향 보고

03 프랑스

- 프랑스 재정감사총국, 특별재정법 장기화에 따른 재정위험 경고
- 프랑스, 2분기 성장 정체로 연간 성장률 재정적자 목표 달성 불확실성 확대
- 프랑스, 국채금리 상승 속 국가채무 이자 부담 확대

06 중국

- 중국 재정부, 하반기 재정정책 추진 방향 발표
- 중국 재정부, 내수 촉진을 위한 대출 이자보조 정책 확대

국제기구

01 OECD

- OECD, 2026년 1분기 회원국 실질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발표
- OECD, 2026년 2분기 회원국 경제성장률 발표

02 IMF

- 아시아의 차세대 성장동력,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과제

주요국
동향8.19. | 공공부채 40조 달러로 역사상 최고점 도달¹⁾²⁾

- 미 재무부에 따르면, 8월 18일 미국의 총공공부채 규모가 40조 4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상회
 - 총공공부채(Total Public Debt Outstanding)는 민간보유부채와 정부 내부부채로 구성되며, 이중 사회보장기금 등 정부 내부부채를 제외한 민간보유부채 규모가 30조 달러 이상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
 - 총공공부채는 미국의 2025년 GDP인 약 31조 달러를 웃도는 규모로, 미국 비금융기업 부채 약 23조 달러와 가계 부문의 부채 약 19조 달러를 합한 규모와 유사
- 경제 규모를 고려한 민간보유부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약 100%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
 - 민간보유부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01년 31.5% 수준이었으나,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때마다 감세 및 재정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 연방정부의 주요 지출이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메디케어 등 의무지출에 집중되어 있어 지출을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
 - 미의회예산국(CBO)은 현행 법률이 유지될 경우, 민간보유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향후 10년 내 120%, 30년 내 17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
- 미국 국채는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투자자 구성의 변화가 국채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는 우려 제기
 - 미국 정부의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해온 미국 국채의 외국인 투자자(공공 및 민간) 보유 비중이 낮아진 반면, 최근에는 헤지펀드사 등 민간 투자자 비중이 증가
 - 금리 변동에 민감하고 레버리지 활용도가 높은 투자자 참여 확대가 국채금리 상승과 가격하락 등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미국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공공부채가 미국 가계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재정을 감당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경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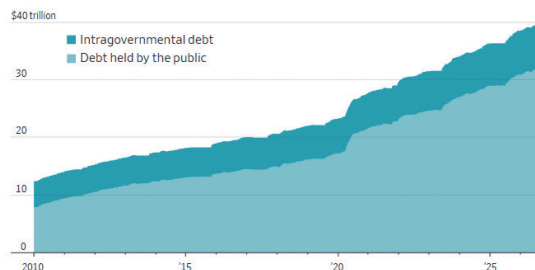
U.S. publicly held debt as a share of GDP



Note: Date and for fiscal years ended Sept. 30 except the figure for 2026, which is as of June 30.

Sourc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1940-2025), Treasury Department and Commerce Department(latest)

U.S. public debt outstanding



Source: Treasury Department

8.19. | 재무부, 장기국채 바이백(Buyback) 규모 두 배 이상 확대³⁾

- 미 재무부는 장기 명목 국채에 대한 바이백 규모를 기존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
 - 잔존만기가 10-30년 구간의 장기 명목 국채를 대상으로, 회당 바이백 규모를 기존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확대
 - 이번 조치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기존 발행 국채(Off-the-run)를 시장에서 매입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
-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격화 우려와 미국 재정 악화 등으로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시행된 이번 조치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 장기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 정책 발표 전일인 8월 18일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5.34%를 기록했으나, 발표 직후 5.18% 수준까지 하락
- 다만 시장에서는 바이백 추가 확대분(최소 140억 달러)이 미국 국채시장 규모(현분기 기준 약 32.2조 달러)에 비해 매우 작아 장기금리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다는 평가
 -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의 금리안정에 대한 대응 정부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으나, 재정적자·인플레이션·국채 공급 증가 등 장기금리 상승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

9.3. | 임시예산 확정으로 연방정부 섯다운 일시 회피⁴⁾

-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일, FY2026 수준의 연방정부 지출을 2026년 12월 11까지 연장하는 임시예산안에 서명
 - FY2027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12개 연간 세출법안 중 최종 확정된 법안은 아직 없는 상황
 - 현행 예산은 FY2027이 시작되는 10월 1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임시예산 확정으로 연방정부의 필수 기능과 주요 사업을 12월 11일까지 정상 운영이 가능해짐
 - 임시예산은 상원 통과(8.8.)→ 하원 통과(9.1.)→ 대통령 서명(9.2.)을 거쳐 법률 제정 절차 완료
-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이미 세 차례나 섯다운이 발생한 가운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추가적인 섯다운 발생을 회피한 것으로 분석
 - 고물가, 대이란 전쟁, 농가 부담을 높인 관세 정책 등으로 유권자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양당 모두 추가적인 정부 운영 중단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평가

1) <https://www.wsj.com/economy/u-s-debt-just-topped-40-trillion-how-we-got-here-c1c6c9d2?mod=Searchresults&pos=7&page=1>
 2) <https://apnews.com/article/treasury-national-debt-limit-a27a8d3651ff810b25c610d3e1b6259d>
 3) <https://www.reuters.com/world/us-treasury-double-sizes-some-debt-buyback-operations-least-4-billion-2026-08-19/>
 4)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trump-signs-bill-avert-government-shutdown-before-midterm-elections-2026-09-03/>



8.17. | 독일, 월간 보고서에서 상반기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물류 리스크는 경고⁵⁾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는 '8월 독일 경제상황보고서(The Economic Situation in Germany in August 2026)'를 공개하며 지정학적 위기 속 독일 경제의 견조한 흐름과 구조적 위험요인을 동시에 진단
 - 중동 분쟁 장기화와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2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2% 증가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보임
 - 내수 부진과 달리 해외 수요 증가에 힘입어 2분기 상품 생산 부문 출하량이 0.7% 성장하였으며, 특히 에너지 집중 산업의 생산량이 전 분기 대비 2.5% 증가하며 경기 반등을 주도함
 - 6월 제조업 신규 수주는 국내 주문 급증(+7.8%) 등에 힘입어 전월 대비 3.1% 증가하였으나, 가계 구매력 저하로 6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 감소하며 내수 침체가 지속됨
- 라인강 저수위 물류 병목 현상 및 노동시장과 재정 부문 하방 압력 지속
 -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주요 수로(라인강 등)의 역사적 저수위 현상이 3분기 산업계의 원자재 공급 병목 및 물류 운송 비용 상승을 유발하여 완만한 회복세를 저해할 유일한 단기 악재로 부상
 - 6월 말 유류세 감면 조치 종료 및 중동 유가 변동성으로 7월 물가상승률이 2.8%로 재반등하였으며, 6월 계절 조정 고용자 수가 2만 3천 명 감소하고 7월 실업자가 6천 명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 악화세가 지속됨
 - 고금리 및 원가 부담 고착화로 2025년 8월 ~ 2026년 7월 법인 파산 건수가 18,478건을 기록, 전년 대비 8.3% 증가하며 기업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옴

8.25. | 독일 연방통계청,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0.3% 발표⁶⁾

-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은 2026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확정치가 전 분기 대비 0.3% 증가했다고 최종 고시
 - 속보치(0.2%) 대비 0.1%p 상향 조정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을 기록
 - 자동차 및 기계류 중심의 상품 수출이 전 분기 대비 2.6% 급증하며 경기 반등을 주도
- * 전체 재화 서비스 수출은 2.0% 증가
-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민간소비(+0.1%)와 정부소비(+0.1%)는 완만한 수준에 그쳤으며, 설비 및 기계 투자(-1.4%)가 대폭 줄어들면서 총고정자본형성은 -0.2% 감소

5)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Redaktion/EN/Pressemitteilungen/Wirtschaftliche-Lage/2026/20260817-the-economic-situation-august-2026.html>

6)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Redaktion/EN/Pressemitteilungen/Wirtschaftliche-Lage/2026/20260817-the-economic-situation-august-2026.html>

- ifo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Climate Index)는 88.8로 반등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 확산⁷⁾
 - 8월 ifo 지수는 전월 86.7 대비 상승한 88.8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
 - 제조업·서비스업·도소매업 전반에서 기업들의 현재 경영 여건 평가와 향후 6개월 전망 지수가 동반 개선되며 경기 바닥 통과 가능성을 시사

9.3. | 킬 세계경제연구소, 2026년 독일 성장을 전망치 대폭 상향 조정⁸⁾

- 킬 세계경제연구소(Kiel Institute, IfW), ifo 연구소, RWI 등 독일의 주요 경제연구소들이 가을 정례 전망을 통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개편
 - IfW는 2026년 독일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1.3%로 대폭 상향 조정한 데 이어, ifo 연구소 역시 기존 0.8%에서 1.4%로 수정 발표함
 - 상반기 예산을 웃돈 수출 증가세와 더불어, 2025년 2월 부채 준칙(Debt Brake) 개혁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국방, 기후, 공공 인프라 재정지출 확대가 민간투자 부진을 상쇄하며 경기 방어막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됨
- 대외 리스크 고착화 및 중국과의 구조적 경쟁에 따른 장기 과제 상존
 - 연구기관들은 상반기 수출 반등이 주요 교역국의 관세 부과 직전 전방 배치(Front-loading, 물량 조기 집행)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높은 에너지 비용, 관료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구조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
 - 특히 9월 초 실시된 로이터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독일 산업체의 83%가 자동차, 공작기계, 의료기기 등 핵심 부문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격심한 가격 및 기술 경쟁으로 인해 누적되는 대중 무역 적자와 수익성 악화라는 구조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8.20. | 프랑스 재정감사총국, 특별재정법 장기화에 따른 재정위험 경고⁹⁾

- 프랑스 재정감사총국(IGF)은 2027년 예산이 제때 채택되지 않아 특별재정법* 적용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건전화가 어려워지고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해당 연도의 예산이 1월 1일 전에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의회가 채택하는 긴급법으로, 기존 세금 징수와 차입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조세 조치는 도입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의결된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

7)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economy-grows-by-03-q2-stats-office-says-2026-08-25/>

8) <https://www.kielinstitut.de/research/publications/news/autumn-forecast-kiel-institute-german-economy-overcomes-cyclical-trough-structural-deficits-remain/>

9)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6/08/20/absence-de-budget-et-loi-speciale-prolongee-l-inspection-generale-des-finances-alerte-sur-des-risques-majeurs_6751089_823448.html?search-type=classic&se_click_rank=1

- 2027년 2월 말까지 예산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선거와 이후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 등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특별재정법 체제가 9~11개월간 이어질 가능성 제기
- 사회지출 등의 자연 증가에도 새로운 조세 조치나 지출 절감 조치를 시행할 수 없어, 특별재정법이 연중 적용될 경우 재정적자가 최소 0.5% 추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재정 불확실성 증가는 경제주체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정부의 차입비용을 높일 위험
- **특별재정법 장기화 시 정부의 위기대응 수단과 지출이 제한되면서 국방·연구·농업·건설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무기 프로그램 지연, 신규 연구사업 공모 중단, 일부 농업지원 제한, 건설사업 및 주택개보수 지원 중단 가능성
 - 2026년 예산에서 정한 총지출 한도가 2027년 불가피한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위험이 있으며, 국방·법무 분야의 예정된 인력 증원도 제한될 가능성

8.28. | 프랑스, 2분기 성장 정세로 연간 성장률·재정적자 목표 달성 불확실성 확대¹⁰⁾

- **프랑스의 2026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기존 예상치 0.2%에서 전기 대비 0.0%로 하향 조정**
 - 프랑스 통계청(INSEE)은 2분기 GDP 성장률을 0.0%로 하향 조정했으며, 1분기 GDP는 전기 대비 0.2% 감소
 - 성장률 하향 조정에는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크게 타격을 받은 농업생산 부진이 일부 영향을 미침
- **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과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위험 확대**
 - 정부의 2026년 성장률 전망치 0.7%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이를 달성하려면 3·4분기에 각각 0.5% 성장해야 하는 상황
-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로 재정적자를 2025년 GDP 대비 5.1%에서 2026년 5.0%로 낮추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확대**
 - 르스퀴르 재무장관은 10월 초 2027년 예산안 제출에 앞서 9월 성장률·재정적자 전망 수정치에 3분기 성장 부진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

9.3. | 프랑스, 국채금리 상승 속 국가채무 이자 부담 확대¹¹⁾

- **프랑스의 차입금리 상승과 부채 이자 부담 확대**
 - 프랑스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약 4.25%까지 상승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기 드문 금리 압력을 받고 있음
 -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3.38%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프랑스와 독일 간 금리 격차는 연초 0.6%p 미만에서 0.8%p 이상으로 확대

10) <https://www.reuters.com/business/french-economy-stable-second-quarter-2026-08-28/>

11)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26/09/03/pourquoi-les-etats-doivent-ils-payer-toujours-plus-cher-pour-s-endetter_6764811_3234.html?search-type=classic&ise_click_rank=1

- 프랑스의 부채가 유럽 내 다른 국가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는 프랑스 부채 조달에 독일 대비 0.8%p를 넘는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
- **부채 부담 확대와 국가의 투자 여력 제한**
- 부채 이자 비용은 2025년 647억 유로로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했으며, 프랑스 감사원은 2030년경 2020년대 초의 약 3배인 1,000억 유로에 근접할 수 있다고 경고
- 증가하는 부채 부담은 프랑스 국가의 투자 여력을 제한



8.21. | ONS, 공공부문 재정동향 발표, 공공부문 지출 증가에 따른 순차입금 확대¹²⁾

- 영국 통계청(ONS)은 26년 7월 공공부문 재정 동향을 통해 완만한 조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순차입금이 전년도 동기 대비 7억 파운드 늘어난 18억 파운드를 기록했다고 발표

* 공공부문(영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 비금융기업, 공공부문 연기금, 영란은행(BoE), 공공 금융기업으로 구성

* 공공부문 순차입금(Public Sector Net Borrowing, PSNB): 중앙 및 지방정부의 총세출이 총세입을 초과하여 민간 및 해외 금융시장에서 순수하게 조달해야 하는 차입액으로 재정건전성의 핵심 척도

- 전년 동월 대비 17억 파운드 증가한 소득세 수입(171억 파운드)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지출 증가율(1,153억 파운드)이 수입 증가율(1,135억 파운드)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
- 공공부문 지출 증가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복지, 부채 이자, 공공 임금 및 정부조달 비용 등의 상승으로 인한 결과
- 26년 7월까지의 누적 차입액은 567억 파운드로, 전년도 동기 대비 60억 파운드 감소했으나, 예산책임청(OBR)의 춘계 전망 예측치를 23억 파운드 이상 상회¹³⁾
- 물가연동국채(Index-linked Gilts) 원리금 상환 부담과 공공부문 임금 인상 타결에 따른 경상지출 증가가 차입금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해석
- 26년 7월 말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0.8%p 낮은 94.1%로 추산되었으며(잠정치), OBR의 예측치보다 0.3%p 낮은 수치를 기록
-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196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무르는 상태로, 정부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유지

* GDP 대비 순부채 비율: 부채의 감당 가능성을 추정가능하며, 영국 재정 상황을 시간순으로 일관성 있게 비교 가능

12) <https://www.ons.gov.uk/economy/governmentpublicsectorandtaxes/publicsectorfinance/bulletins/publicsectorfinances/july2026>

13)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kingdom/government-budget-value/news/577128>

9.1. | 정부 발행 국채(Gilt) 금리 5.89%로 급등: 28년 중 최고치 기록¹⁴⁾

- 글로벌 채권 매도세와 중동발 에너지 쇼크로 인한 2차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며, 영국 정부의 30년 만기 국채(Gilt) 금리가 5.89%까지 치솟아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

* Gilt: 영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공식 명칭으로, 금리 변동은 국가 조달 비용뿐만 아니라 모기지 및 회사채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수행

- 기준물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5.22%를 기록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
- 이는 8월 하순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기조와 영국 내 임금-물가 연쇄 상승 우려가 결합되어 채권시장의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을 급격히 밀어 올린 결과로 해석
-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정부의 국채발행 계획, 가계 가처분 소득 압박 등 재정 조달 비용 및 가계 등에서 파급효과가 예상
 - 국채금리 1%p 상승 시 연간 정부 이자 비용 부담이 약 200억 파운드 증가하는 구조하에서, 장기물 금리 급등은 차기 회계연도 국채발행 계획에 치명적인 제약으로 작용
 - 또한, 시중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2년 및 5년 고정금리 모기지 상품 금리가 다시 6% 선을 위협하여 가계 가처분 소득을 강하게 압박
- 시장에서는 영란은행(BoE)이 국채 매각 속도를 조절하여 국채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지속적 긴축을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팽팽하게 대립
 - 영란은행이 양적 긴축의 일환으로 보유 국채를 시장에 매각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차입 수요가 맞물린 국채 수급 불균형 극대화 우려가 상존하는 등 통화-재정 정책의 상충이 발생



8.27. | 내각부, 8월 경제 동향 보고¹⁵⁾

- 일본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나, 중동 정세와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에 주의
 - 개인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
 -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거나, 산업 생산은 정체 상태임
 - 기업 이익은 개선되고 있지만, 중동 정세로 인한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고용 상황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는 완만하게 상승해 옴
 - 단기 전망과 관련하여, 고용 및 소득 상황의 개선과 정책 효과가 완만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동 정세 및 자연재해의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금융 및 자본 시장의 변동 등의 영향에도 유의

14) <https://global.morningstar.com/en-gb/news/alliance-news/1788259717981565100/long-term-borrowing-costs-leap-to-28-year-high-ahead-of-uk-budget>

15) <https://www5.cao.go.jp/keizai3/getsurei-e/2026aug/html>

- 정부는 지난 7월 21일 내각이 승인한 「2026 경제·재정 관리 및 개혁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고 선제적인 공공 재정'이라는 기조를 통해 '강력한 일본 경제'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
 - 단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으로 회귀하지 않고 성장 지향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보장하는 동시에, 다양한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
- 중동 정세에 대응하여 정부는 단기적 조치와 위험을 최소화하여 2026 회계연도 예산 및 추경예산을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고 유연하게 집행할 예정이며, 최근 구마모토 지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생명과 생계 지원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
-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 및 물가 변동에 대응하여 유연한 정책 운용을 위해 긴밀히 협력
 - 정부는 중앙은행이 경제 활동, 물가 및 금융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화정책을 운용함으로써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2%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함



8.21. | 중국 재정부, 하반기 재정정책 추진 방향 발표¹⁶⁾

- 중국 재정부는 2026년 재정지출과 정부 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
 - 2026년 재정지출 예산은 처음으로 30조 위안을 넘어섰으며, 신규 정부 채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조 8,900억 위안으로 편성
 - 하반기에는 지방정부 특별채권과 초장기 특별국채 2조 위안 이상을 추가로 발행·사용하여 재정정책의 강도를 유지할 계획
- 재정지출이 부진한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보조금을 신속하게 배분하여 민생정책의 집행을 가속화
 - 재정·금융 연계 내수 촉진 정책을 보완하여 민간투자와 소비 지출을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금융 수단을 활용해 주요 사업 건설을 지원
 - 3,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여 중앙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능력을 강화

16) https://www.gov.cn/zhengce/202608/content_7078847.htm

8.21. | 중국 재정부, 내수 촉진을 위한 대출 이자보조 정책 확대¹⁷⁾

- 중국 재정부는 주민 소비와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이자보조 정책을 확대
 - 개인 소비 대출과 서비스업 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보조를 시행하고, 중소·영세기업의 신규 운전자금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중소·영세기업의 신규 운전자금 대출에 최대 2년간 연 1%p의 이자 지원
- 개인 소비 대출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
 - 자동차 구입과 주택 개조 등을 위한 신규 신용카드 할부를 이자보조 대상에 포함
 - 개인 소비 대출과 신용카드 할부에 대해 연 1%p의 이자를 지원하고, 개인별 연간 이자보조 한도를 금융기관당 3,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인상
- 중소·영세기업과 서비스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한도 및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
 - 중소·영세기업의 이자보조 대상 대출 한도를 금융기관당 연간 5,000만 위안에서 7,500만 위안으로 인상
 - 서비스업 사업자의 이자보조 대상 대출 한도는 금융기관당 연간 1,000만 위안에서 2,000만 위안으로 확대
 - 이자보조 취급 금융기관을 기존 약 100개에서 약 400개로 늘렸으며, 확대된 정책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17) <https://finance.sina.com.cn/wm/2026-08-21/doc-inipaenv1658300.shtml>

국제기구
동향8.6. | OECD, 2026년 1분기 회원국 실질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발표¹⁸⁾

- 2026년 1분기 OECD 회원국의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전분기 대비 0.2% 증가하여, 2025년 4분기 증가율(0.6%)보다 둔화
 -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0.2%에서 0.3%로 소폭 상승하면서 경제 성장과 가계소득 증가세 간 차이가 나타남
 - 자료가 집계된 21개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은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이 증가한 반면, 8개국은 감소
- 주요 7개국(G7)의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평균 0.2% 증가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임
 - 이탈리아는 근로자 보수 증가 등에 힘입어 0.8% 증가했으며 캐나다, 독일, 미국은 각각 0.2% 증가
 - 반면 영국은 소득·재산 관련 조세 부담 증가, 순사회급여 감소 및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0.8% 감소했으며, 프랑스도 0.1% 감소
- 기타 OECD 회원국 중 헝가리와 칠레는 비교적 높은 가계소득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그리스와 오스트리아는 큰 폭으로 감소
 - 헝가리는 근로자 보수가 6.3% 증가하면서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이 6.0% 증가했으며, 칠레는 근로자·자영업자 보수와 순재산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4.8% 증가
 - 그리스와 오스트리아는 순재산소득과 사회급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각각 3.6%, 2.8% 감소

8.24. | OECD, 2026년 2분기 회원국 경제성장률 발표¹⁹⁾

- 2026년 2분기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5% 증가하여, 1분기 증가율(0.4%)보다 소폭 확대
 - 잠정치가 집계된 30개 회원국 가운데 27개국은 성장했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등 3개국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
 - OECD 회원국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1분기 1.7%에서 2분기 2.3%로 상승
- 주요 7개국(G7)의 경제성장률은 2026년 1분기 0.4%에서 2분기 0.3%로 둔화
 - 독일은 0.4%에서 0.2%, 이탈리아는 0.3%에서 0.2%, 일본은 0.5%에서 0.3%로 성장률이 하락
 - 영국과 미국은 각각 0.6%에서 0.4%, 0.5%에서 0.4%로 성장세가 둔화한 반면, 캐나다는 0.0%에서 0.8%로 성장률이 상승

18)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6/08/growth-and-economic-well-being-first-quarter-2026-oecd.html>

19)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6/08/gdp-growth-second-quarter-2026-oecd.html>

- 일부 주요국에서는 민간소비와 투자 부진뿐만 아니라 정부소비 감소도 경제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침
 - 일본은 민간소비 정체와 재고 감소, 투자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하였으며, 영국은 민간소비 약화와 정부소비 감소, 미국은 수출 증가세 둔화와 재고 및 정부소비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제약
 - 한편 아일랜드와 이스라엘이 각각 3.9%, 3.6% 성장하며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



9.1. | 아시아의 차세대 성장동력,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과제²⁰⁾

*IMF F&D Magazine, 2026년 9월호에서는 'Asia's New Opportunity'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편집장의 서신을 통해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함

- 아시아의 핵심 과제는 기존 성장모델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재점화하는 것
 -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곳이며, 세계 경제 성장과 무역, 혁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기에 개발, 기술, 권력에 관한 글로벌 논쟁에 영향을 미침
 - 현재 아시아의 부상을 뒷받침하던 동력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무역은 분열되고 에너지 안보는 우려의 대상이며, 인구 고령화는 심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하지만 아시아의 경제적 잠재력은 막대하다고 평가하며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는 국가들은 확대되는 노동력을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한국·일본과 같이 고령화가 빠른 국가들은 현재 그러하듯이 기술혁신을 통해 인구 감소의 성장 제약을 완화할 수 있음
- AI, 디지털화, 지역 통합은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경로를 열어줄 핵심 수단으로 평가
 - 최근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 불만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청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미래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비정규 경제권에 있는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
 - 디지털 시스템은 아시아가 무역에서 미국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 자국 통화 및 디지털 결제, 토큰화 금융 등으로 다변화하고 결제 시스템이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동시에 개방적인 글로벌 시스템에 기대하기보다 지역 협력을 통해 산업정책을 조율하고 AI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하는 등 다자 연합 체계를 구축해야 함

2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andd/issues/2026/09/editor-letter-asias-next-growth-story-gita-bhatt>;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fandd/article/2026/09/fd-sept26-online.pdf>

- 아시아의 차세대 성장동력은 회복력과 재도약이며, 깊은 지역 통합과 포용적 기술 활용, 실용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 방향을 제시
 - 아시아의 초기 눈부신 경제 성장은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세계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지역으로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수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성과를 가져옴
 - 올바른 정책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아시아는 단순히 과거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지역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결정하는 지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09

2026 September

| 재정 |


**정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기획예산처 8.28.)**

- 정부는 8월 28일(금)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개최하고,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
- 기존 청년정책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첫 일자리 진입 지연, 자산형성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지 못하고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 지적
-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설정하고, ①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일자리·창업), ② 출발선의 격차 완화(교육·주거·자산), ③ 삶의 질 강화(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대폭 확대
- 전달 플랫폼(온통청년, 고용24) 고도화를 통한 정책 검색과 신청 연계 및 AI 기반 맞춤형 추천·서비스 제공, 예산 사업에 대한 청년 체감도 제고(청년 참여예산) 등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
- 단기 대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수립·발표할 예정


**정부,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기획예산처 9.1.)**

- 정부는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
- 2027년도 예산안은 이번 정부가 온전하게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

-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라는 데 의의가 있음
- 재정제도의 전면 혁신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
- 2027년 국세수입 중 추가세수분을 활용하여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① 청년, ② 성장동력, ③ 지방, ④ 교육·인재에 투자하고,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축소하여 기존 중기계획보다 국가채무규모를 감축할 계획
-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역대 최대인 12.8% 증가한 820.9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0.1%,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8.3%로 전망되며, 이를 2030년까지 각각 3.0 이내, 4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해나갈 예정

| 경제 |


**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재정경제부 9.1.)**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
-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1조 원으로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통합투자세액 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2024년 대비 5.6조 원 증가하였고,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5.5%)를 0.4%p 상회
- 2026년 국세감면액은 반도체 분야 공제율 상향 및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공제여력 확대 등으로 2025년 대비 10.9조 원 증가한 87.0조 원으로 전망되며,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6.4%)를 0.1%p 하회할 것으로 예상
- 2027년 국세감면액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 및 R&D·투자지출 증가 등으로 2026년 대비 17.9조 원 증가한 104.9조 원으로 전망되며,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16.6%)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

1월

| 재정 |

- 2027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경제 |

- 202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월

| 재정 |

- 2025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5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3월

| 재정 |

-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예산처→각 중앙관서)
-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국무회의 의결

| 경제 |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4월

| 재정 |

- 2026년 추가경정예산 국회의결·확정
- 2025년 결산 감사 의뢰 (기획예산처→감사원)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5월

| 재정 |

- 2027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2025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5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6월

| 재정 |

- 202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경제 |

- 한국은행 2024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5년 국민계정(잠정), 2026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7월

| 재정 |

-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경제 |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8월

| 재정 |

- 2027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9월

| 재정 |

- 2027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0월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1월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 국제 |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2월

| 재정 |

- 2027년 예산 확정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재정정책의 역할과 그 역사적 연원의 중요성

재정정책은 단순한 세입·세출의 조정을 넘어 사회경제구조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주요 시기별 재정정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재정정책이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짚어본다. 과거의 재정정책이 오늘날 우리 사회경제의 구조를 어떻게 형성해왔는지 돌아보며, 현재와 미래의 재정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1. 재정정책의 중요성과 역사적 접근의 중요성

(1) 사회경제문제의 실태와 재정정책의 역할

우리 사회는 정부 수립 후 오랫동안 저개발국 내지 후진국이라 불리면서 사회 곳곳이 생존을 목전에 두고 고난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대한민국은 지난한 경제개발 계획기를 거쳐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어느새 10대 경제 강국을 넘나드는 세계에 우뚝 솟은 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출생률 최저, 자살률 최고, 노인빈곤율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일극 중심 발전이 심화되면서 지역소멸 현상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등 많은 사회경제지표에서 삶의 조건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계층 간, 기업 내지 산업 간, 그리고 지역 간 등 사회 제 부문 간의 불균등발전 구

조가 심화되어 가면서 잉태된 현상들이라 할 수 있다. 무릇 어느 사회나 그 사회경제의 구조적 실태는 무엇보다 그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축적양식(행태)을 비롯하여 경제주체들의 경제생활양식(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이하 ‘양식’, ‘행태’, ‘방식’ 등을 같은 의미로 혼용함). 그런데 한 사회 경제주체들의 경제생활양식을 규정짓는 기본적인 틀은 그 나라의 ‘경제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경제체제 하에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매 시기의 정권이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구사하는 제반 ‘경제정책’ 운영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다. 결국, 현실에서 운영되는 각종 경제정책의 구조적 특성이 해당 시기 기업의 축적행태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전반적인 경제생활행태에 영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당 사회경제의 구조적 실태를 낳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¹ 그런데 이 지점에서 본고는 그러한 제반 경제정책의 이면에는 해당 정책들

이 특정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게 그 물질 기초를 제공해주는 ‘재정정책’ 면에서의 지원조치들이 뒷받침되고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강조하고자 한다.

(2) 재정정책에 대한 인식과 역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 단계에서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Fiscal Policy’라는 개념을 돌아보면서 ‘재정정책’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두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케인스(J. M. Keynes)적 전통에서 만들어진 ‘fiscal policy’라는 개념은 총량적인 재정수지를 통해 한나라 전체의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을 일컫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주위에 많은 전문가나 관료들은 ‘재정정책’을 이와 같은 ‘fiscal policy’로 인식하여, 재정정책 문제를 다룰 때 총수요조절을 위한 긴축 또는 확장 정책수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안정적인 재정수지 조절에 대부분의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세출과 세입이라는 양적 지표로 나타나지만, 정부가 그러한 재정 활동을 수행하는 ‘근원적인 취지’라는 맥락에서 보면, 해당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응하게 세출·세입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간인들의 물질적 삶의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재정수지를 통해 총수요를 조절하는 양적인 개념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세출과 세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축적양식을 비롯하여 해당 사회 경제주체들의 경제 활동양식에 영향을 주어(일정한 방향으로 선도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의 물질적 삶의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재정정책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나 정치가, 관료들로서는 단순히 총량적인 재정수지 변화추이나 그 속에 담겨있는 양적인 재정안정성 문제 자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정정책 운영을 통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경제 활동양식에 어떠한 작용을 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의 구조적 실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의 물질적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3) 재정과 사회의 상호유기적 관련성에 대한 인식과 역사적 접근의 중요성

지금까지는 재정정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느라 재정정책이 해당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실태에 주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정이라는 것은 거꾸로 해당 사회경제실태에 의해 영향을 받아 재정의 규모 내지 재정정책의 내용이 제약 받는 측면도 있다. 말하자면 재정정책과 사회경제실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사실

1 일반적으로 한 ‘사회’는 다양한 이질적인 개인 내지 계층 또는 기업 내지 기업군(群)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책수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개인(계층)이나 기업(군)들에게 서로 다른 방식이나 서로 다른 정도로 차등적(차별적)인 영향을 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에 따라 정책의 편익 또는 부담이 서로 다르게(이질적으로) 귀착되게 하는 특성을 지칭한다. 본고에서 이와 같은 ‘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을 중시하는 것은 특정 정책이라는 것은 그로 인한 편익 또는 부담의 차등적 귀착구조에 따라 특정개인 또는 특정기업으로 하여금 차등적 편익구조에 의지하여 부를 축적하는 축적양식을 선도(유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계층, 기업, 산업, 나아가 지역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 제 부문 간의 균등 또는 불균등발전의 구조적 특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둔다.

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찍이 J. A. Schumpeter는 “재정은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 중의 하나이다”라면서, “그것은 재정정책은 (재정 현상은 모든 변화의 원인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이라는 점에서) 원인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재정 현상에 반영되게 된다는 점에서) 징후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통해 사회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충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파한 적이 있다.² 한편 초기 재정사회학의 대가로 알려져있는 R. Goldscheid도 “재정활동의 형태(구조)는 나라와 사회의 발전에 언제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조세투쟁은 계급투쟁의 가장 오래된 형태이며, 재정행위는 격심한 정신적인 변혁의 시기에서조차 사회문제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기여하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해왔다”고 하고 있는 바,³ 이 또한 재정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앞의 Schumpeter와 같은 맥락의 인식을 전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재정정책과 사회경제실태는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특정 시기 재정정책이 다양한 정책수단을 구사해가면서

바꾸고자 하는 문제가 되는 당면한 사회경제실태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과거 정부 재정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특정 시기 재정정책을 구상해감에 있어서는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이 당시 사회경제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어떻게 구상하고 실행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그래야 현재 정부가 지양하고자 하는 현 단계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해내기 위한 대안을 현재 재정정책의 구상에 제대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재정정책의 수립과 운영문제를 다루는 연구자를 비롯하여 정치가나 관료가 재정정책의 역사적 흐름(인과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라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경제실태를 규정짓는 경제주체들의 경제 활동행태를 결정짓는 역사적 경로를 파악해내기 위해, 지난 수년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간하는 『나라재정』을 통해 정부 수립 이후 주요 국면마다⁴ 각 시기 정권이 구상하고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과 그 정책수행에 물적 기초를 제공해주었던 재정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해내는 작업을 이어왔다.⁵ 이하에서는 그간에 게재된 내용을 개

2 J.A. Schumpeter, “The Crisis of the Tax State,” 1918, reprinted in W.F.Stolper and R.A.Musgrave, *International Economic Papers*, No. 4(1954), p. 7.

3 Rudolf Goldscheid, “A Sociological Approach To Problems of Public Finance,” 1925, translated from German by Elizabeth Henderson, Musgrave & Peacock, *Classics in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1967, p. 202.

4 필자가 재정정책 전개의 역사적 흐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를 지양하고자 하는 재정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부들의 정책적 경험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필자가 이하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시기 재정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발견한 재정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이라는 것도 다분히 필자 자신이 찾은 자료에 바탕을 두고 필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것임을 밝혀둔다. 앞으로 다른 자료가 발견된다든가 그 과정에서 필자의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언제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다른 논자들이 다른 자료에 근거해서 제시하는 다른 주장도 부인하지 않는다. 단지 현 상태에서 어느 견해가 당시 사회구성원들의 실제 물질적 삶의 실태를 더 잘 규명해내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독자들의 판단에 일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E.H.Carr의 *What is History?*(1961, p. 30)을 참고하기 바람.

5 필자가 재정정책 전개의 역사적 흐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를 지양하고자 하는 재정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부들의 정책적 경험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필자가 이하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시기 재정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발견한 재정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이라는 것도 다분히 필자 자신이 찾은 자료에 바탕을 두고 필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것임을 밝혀둔다. 앞으로 다른 자료가 발견된다든가 그 과정에서 필자의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언제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다른 논자들이 다른 자료에 근거해서 제시하는 다른 주장도 부인하지 않는다. 단지 현 상태에서 어느 견해가 당시 사회구성원들의 실제 물질적 삶의 실태를 더 잘 규명해내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독자들의 판단에 일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E.H.Carr의 *What is History?*(1961, p. 30)을 참고하기 바람.

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관심 있는 전문가를 비롯하여 재정 관련 공무 담당자나 일반 독자들에게 참고자료 제공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2. 정부 수립 이후 전개된 재정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과 역사적 의의

(1) 1957년 「재정안정계획」의 출범·중단·부활과정에서 보인 재정정책 운영의 구조적 특성⁶

1) '계획' 출범 시기

정부 수립 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의 유제로 물려받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 6·25전쟁 수행과 그 복구과정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원조물자에 의지하여 재정·금융을 운영해나가면서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나라 경제를 관리해나가는 데 급급했다. 그러던 중 1957년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바뀌는 상황에 접하여 원조국이었던 미국의 요구에 의해 긴축 위주의 재정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 수립의 기준틀 구실을 하는 소위 「1957년 재정안정계획(이하 '계획')」이 수립·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이후 이어지는 연도들의 재정정책 운영의 준거 틀의 구실을 해나갔던바, 이 '계획'은 통화증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통화량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⁷

이 시기 재정활동은 '계획'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면서 긴축기조로 운영해나갔다. 이 시기 재정운영의 성

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동 '계획'이 당시의 통화량 조절 내지 물가안정, 그를 위한 재정수지 균형이라는 현상적으로 양적인 안정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정책의 본질은 그를 통해 당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실태를 개선시키는데 그 뜻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총량적인 재정적 성과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군사비, 사회안정비는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데 비해, 당시 전 재복구 이후 새로운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관련 경비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 결과 결국 우리 사회의 경제적 기반은 더욱 취약해지게 됨으로써 결국 총량적인 경제적 성과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2) '계획' 중단 시기

이렇게 1957년에 시작되어 당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기본 틀을 제약해왔던 미국 주도의 '계획' 체제는 출범 이후 1960년까지 이어져 오다가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주도의 엄격한 긴축정책을 중단시키고 혁명의 가치를 담아내려는 의지를 갖고 '경제제1주의'를 기치로 확장정책을 시도해나갔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제대로 정책을 펼쳐 보기도 전에 5·16군사정변으로 군사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던바, 군사정부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미국주도의 '계획'에 의한 긴축정책의 적용을 거부하고 마찬가지로 '경제제1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확장정책기조

6 이하 1957년 「재정안정계획」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에 관한 서술 내용은 필자가 「나라재정」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내용인 바, 이 중 동 '계획' 출범기의 내용은 우명동(202312), 중단·부활 시기의 내용은 우명동(202402)에 바탕을 둔 것임. 자세한 내용은 각 원문을 참고 바람.

7 그런데도 이 '계획'을 '재정안정계획'이라 부른 것은 당시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량 조절관련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재정활동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우명동, 202312, 51-52).

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하에 군사정부는 1961년에 이어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하 ‘제1차 5개년계획’)의 제1차연도인 1962년에도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펼쳐나가면서 경제적 기반구축을 위한 재정투융자지출을 늘려나갔다. 그러나 ‘계획’이 중단된 상태에서 당시 일반재정 세입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밖에 안 되던 상황에서 확장정책을 추진해나감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그에 따라 국채 발행과 차입금을 늘리고 통화공급을 늘리면서 물가가 급상승하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3) ‘계획’ 부활 시기

이에 당시 군사정부는 서둘러 미국과 협의를 거쳐 1963년에 다시 ‘계획’ 체제를 수용하고(부활시키고) 미국 주도의 엄격한 긴축정책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여 1963년부터 다시금 원조를 받아가면서 ‘제1차 5개년계획’의 목표를 완화된 수정안을 만들어 추진해나갔다.

이렇게 다시 긴축정책 기조를 수용함에 따라 다시금 재정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이듬해에도 미세한 증가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수입 면에서도 1964년에는 국채발행과 차입금이 없어진 대신에 원조로 인한 대충자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결국, 재정수지는 다시 흑자 내지 균형상태를 보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렇게 재정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투융자 부문의 지출은 큰 폭으로 줄어들어 경제적 기반구축과는 점점 멀어지는 상황을 보였다.

이와 같은 ‘계획’의 출범과 중단, 그리고 부활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정운영의 성격을 돌아보면, 한편으로는 한 나라의 재정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국가가 대외적으로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자율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당시 주어진 사회경제적 기반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정책이 구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의 재정운영 과정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재정정책 수행에서는 단순한 양적인 재정수지상의 안정보다 정책수행의 대상인 ‘현실’로부터 제기되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실태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 시기에 보인 재정정책 운영의 구조적 특성⁸

1) 제1차 5개년계획 추진 시기

전술한 바와 같이 5·16군사정변 후 군사정부는 혁명적 가치를 담아내려는 의지를 갖고 의욕적으로 ‘제1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계획’의 제약을 무시하고 추진한 1차연도의 성과가 의도된 대로 나오지 않자, 1963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다시 ‘계획’ 체제를 수용하면서 긴축 기조하에서 ‘제1차 5개년계획’을 애초보다 목표를 완화된 수정안에 따라⁹ 추진해나갔다.

그러던 중 1965년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면서 동 ‘계획’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긴축재정에 대한 제약이 크게 완화되면서, 군사정부는 정책수행을 위한 ‘대외적 자율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다시금 확장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내용적으로는 수정된 ‘제1차 5개년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적인 대외의존적·수출주도적인 ‘불균형성장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이 시기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원조도 계속 들어오고 수출시장도 확보되면서 국내적으로도 자율적인 자원 동원능력도 커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1965년, 1966년 재정 규모를 증가시켜왔으며, 그 재원으로 1965년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자금에 의존한 바 컸으나 1966년에는 그 수준이 크게 떨어졌지만, 그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조세 증징과 외자도입 등으로 메워가면서 확장정책을 펼쳐나갔다. 그러면서 계획에 의한 제약으로 늘리지 못했던 산업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투융자 비중을 높여가면서 1965년과 1966년에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대외의존적·수출주도적인 성장정책을 추진해왔던바, 이와 같이 정부가 의도하는바 대외의존적·수출주도적 성장정책 추진을 위해 부족한 국내외 자원을 모으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특정 산업을 중요산업 내지 전략산업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관련 개인 내지 기업에 차등적·선별적인 재정지원책을 구사하면서 불균형성장정책을 운영해나갔다. 이는 재정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금융부문을 비롯한 정책 일반에 적용되는 지원방식이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출주도적인 성장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조세감면 등 차별적인 재정지원책이 실시되었던바, 금융부문에서도 부족한 내자조달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가던 중 특히 1965년 9월에는 이자율 현실화 조치를 취하여 사실상 ‘역금리’로 조달된 재원으로 불균형적인 성장지원책을 구사해나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불균형성장정책은 차등적·선별적인 지원정책으로 구체화되어 당시 기업들로 하여금

차등적인 특혜에 의지해 기업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대추구적인 비생산적 축적양식을 배태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에 불균등발전구조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나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지대추구적인 비생산적 축적양식은 후일 과잉투자·부실투자라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배태시키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2) 제2차 5개년계획 이후 시기

전술한 바와 같이 ‘제1차 5개년계획’ 마지막 1965, 1966년에 전례 없는 높은 성장성과를 보이면서, 군사정부는 ‘제2차 5개년계획기’에 들어 기존의 정부 주도 정책 노선을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그러던 중 그간의 성장성과에 힘입어 1969년 하반기에 기존의 미국 원조 당국과 협의해서 그동안 운영해오던 「계획」 체제를 마무리 짓고 국제기구인 IMF와 협의에 의해 재정금융정책을 수행해나가면서, 1970년 이래로는 우리 정부는 재정금융정책 면에서 온전히 대외적 자율성을 갖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재정금융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대외적인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한 군사정부는 1972년 10월 유신을 통해 보다 집권적이고 강력한 지배체제를 통해 기존의 대외의존적·수출주도적 불균형성장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차등적·선별적으로 추진해나갔다. 이러한 정책 기초하에서 1972년 시작된 ‘제3차 5개년계획’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을 맞

8 이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에 관한 서술 내용은 필자가 「나라재정」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내용인 바, 구체적인 내용은 ‘제1차 5개년계획’ 시기는 우명동(202402), 그리고 제2차 5개년계획 이후 시기의 내용은 우명동(202406 및 202407)을 참고 바람.

9 기존의 ‘제1차 5개년계획’은 ‘수입대체 발전전략’ 내지 ‘균형발전전략’을 담고 있었던데 비해, 수정안에서는 당시 미국이 권고하는 ‘수출주도적’이고 ‘대외지향적인 불균형발전전략’을 담아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5개년계획’의 큰 틀이 달라지고 있었으며, 이렇게 바뀐 ‘수출주도적·대외지향적 불균형발전전략’은 이후 이어지는 ‘5개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우명동, 202402, p. 51의 각주2)를 참고).

아 잠시 주춤하였으나, 당시 우리나라가 경공업 중심의 저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였다는 점과 석유파동 이후의 중동 붐을 계기로 조속하게 회복세를 타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1973년 이래로 중화학공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불균형성장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해나갔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제4차 5개년계획’ 시기에도 그대로 이어져 1970년대 말까지 기본 틀을 유지해나갔다.

이렇게 1965년 이래로 본격적으로 대외의존적·수출 주도적 불균형성장정책이 추진되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불균형성장을 위해 구사된 차등적·선별적인 지원정책에 의해 차등적인 특혜에 의지해 기업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대추구적인 비생산적 축적양식’이 배태되어가는 조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결과 구체적으로 1969년이 되면서 기업의 과잉투자로 인한 부실기업 문제가 현실적으로 노정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부실기업 문제에 직면한 군사정부는 그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대응을 구상해내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1972년 경제적으로는 ‘8·3조치’, 정치적으로는 ‘10월 유신’을 통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처해나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마저도 다양한 경제정책과 그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난시기 과잉투자를 일으켰던 차등적·선별적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적용해가면서 대처해나갔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3차, 제4차 5개년계획기에 중화학공업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해 특정 산업에 대해 다양한 감면조치를 취

한다든가, 「국민투자기금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중요산업에 집중적으로 용자를 해주었을 뿐 아니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안정화’ 조치들을 취해가면서 같은 맥락의 차등적 지원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차등적·선별적 지원정책에 기대어 지대적 편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과잉투자, 부실투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계층 간, 그리고 기업을 비롯한 제 부문 간 불균등발전 구조가 5개년계획의 차수를 더해가면서 더욱 구조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는 가운데 1978년 말 불어닥친 제2차 석유파동과 이로 인한 세계적 불황이라는 축적의 대외적 조건의 변화를 계기로 그간에 누적되어 우리 사회 제 부문 간 불균등발전의 구조적 모순이 폭발되면서, 1978, 1979년 치명적인 경제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때마침 발생한 1979년 10월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라는 정치적 격변이 겹치면서 우리 사회는 그간에 누적되어 왔던 내적 모순이 폭발하면서 정치체제의 변화와 함께 경제발전 전략에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3) ‘3저호황 전·후’ 시기 재정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¹⁰

1980년대 신군부 정권에서는 그들이 직면한 침체적 경제 상황이 지난날 고도성장기의 ‘정부 주도’ 성장 정책에서 기인하였다는 인식 위에 ‘민간주도’ 내지 ‘시장중시’, 그리고 그에 상응하게 지난날의 ‘차등적·선별적 지원’ 대신에 ‘기능별 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10 이하 ‘3저호황’ 전·후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에 관한 서술 내용은 필자가 「나라재정」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내용인바, 구체적인 내용은 우명동(202410 및 202411)을 참고 바람.

바꾸어나갔다. 그리고 재정정책 면에서도 그러한 정책 일반의 기조에 부응하여 확장정책 대신에 긴축정책 기조를 택하면서, 이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제도 도입, 영기준 예산편성방식 채택, 공기업 민영화 등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갔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전환은 1970년대 고도성장기 이래로 기득권화되어 있던 불균등 사회경제구조를 지양해내는 조치들이 결여된 상태에서 취해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실제 경제현장에서는 기존의 기득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던 가운데, 1986~1988년 소위 '3저 현상'이라는 우리 역사상 보기 드문 대외적 호조조건에 힘입어 수출이 늘고 생산과 소득이 늘어나는 특수한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시 정부는 지난날 고도성장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체화되어 있던 사회 전반의 불균등발전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틀을 모색하기 보다는 수출 호조에 따른 통화증발요인 흡수차원에서 재정 긴축정책을 이어가면서 지난날의 성장정책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경제현장에서는 차등적·선별적 지원정책이 그대로 이어짐으로써 지난날 자리잡은 특혜를 쫓는 비생산적 축적행태는 그대로 온존되어 심화되어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여전히 그러한 특혜의존적 경제생활행태가 불러온 토지투기에서 비롯된 지가상승, 부실기업의 문제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3저 호황'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 각 계층들로부터 다양한 공적 내

지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면서 1987년 사회민주화운동이 고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제6공화국이 출범하기 이르렀다. 이와 같이 제6공화국의 문을 연 노태우정부는 민주화열기 속에서 지대추구적 경제구조 지양을 위한 사회적 열망을 수용하여 '종합토지세'와 '토지공개념' 제도 등 개혁적 정책을 도입·운영해 나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지는 '3저호황' 소멸 이후 경제침체국면 극복을 명분으로 성장정책으로 회귀하면서 재정정책면에서도 다시금 확장정책으로의 기조전환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전환으로 개혁조치들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지난 고도성장기에 자리잡아온 우리사회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왜곡된 역사적 유제청산의 과제는 이어 들어선 문민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4) IMF경제위기 전·후 시기 재정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¹¹

1) '신경제5개년계획' 추진 시기 재정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

이러한 국면에서 등장한 문민정부는 당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제 문제의 원인을 과거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경제 운용"에서 찾고,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한국경제"를 「신경제」로 정의하고, 이러한 신경제를 통해 「신한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나갔다. 이러한 「계획」하에

11 이하 서술 내용 중 문민정부 '신경제 5개년계획' 추진 시기의 내용은 우명동(202604), 국민의 정부 'IMF 경제위기 대응' 시기의 내용은 우명동(202606)에 바탕을 둔 것임. 자세한 내용은 각 원문을 참고 바람.

문민정부는 한편으로는 대내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주요 개혁조치들과 더불어 규제 완화와 자유화 조치들을 취해나갔으며, 대외적으로도 이러한 대내적인 자유화 조치에 상응하게 금융, 외환, 무역 등의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계화 내지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갔다. 아울러 재정정책 면에서도 이와 같은 「신경제5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물적 기초 제공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재정 능력 확충과 재정제도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개혁조치를 추진하였다. 다양한 제도개혁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당시 연금 등 기금이 활용하고 있던 자금을 통폐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신설·운영한 사실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석유사업기금 등 5개 기금을 통합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 사실을 들 수 있는바, 이러한 조치들은 자유화와 국제화 취지에 부응하는 각종 사업을 위한 재정투융자 재원확보를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문민정부 재정운영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큰 영향을 끼친 제도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혁적인 조치들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원래 제도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었다. 먼저 금융실명제와 그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실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는 제도도입 초기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고액 예금자로 하여금 고소득층의 기득권을 이어가게 함으로써 기존의 차등적·선별적 지원 정책적 특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더 중요하게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에서는 연금 등의 여유자금을 모아 이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하여 정부가 선정한 전략산업 내지 사회간접자본 등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통로로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차등적이고 선별적인 지원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도 같은 맥락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그

렇지 않은 기업간의 차별적 성장을 유발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문민정부는 금융자유화 내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단자회사의 ‘종합금융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갔던 바, 이 과정에 종금사에 주어진 금융상의 특혜는 조세감면 및 정책자금대출 등 재정정책수단과 맞물려 재벌위주의 과잉투자구조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마디로, 「신경제 5개년계획」의 구상에 따라 시행된 각종 규제완화 내지 시장자유화, 세계화조치들은 사실상 경제주체들에게는 지난날의 차등적·선별적 지원정책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축적행태를 더욱 특혜의존적으로 왜곡시킴으로써 과잉투자로 인한 부실기업을 양산하는데 정책적으로 기여하게 되었으며, 급기야 1997년 들어 IMF 구제금융사태를 불러오기에 이르렀다.

2) ‘IMF 경제위기 대응’ 시기 재정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

IMF 경제위기 상태를 물려받은 국민의 정부는 우리사회가 물려받아 지양해야 할 유제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미확립”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양해내기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을 국민의 정부 기본철학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유와 엄격한 자기 책임, 시장경쟁을 통한 보상, 균등한 기회의 보장,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시장개방을 기본원칙으로 공공부문·금융·기업·노동 등 4개 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갔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IMF가 구제금융을 지원해주면서 우리정부에게 제시한 경제프로그램의 이행 의무가 담겨 있었는데, 위와 같은 구조개혁을 물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재정정책에서는 무엇보다 금융부문의 고이자율정책과 더불어

균형재정달성을 위한 긴축재정정책 이행 요구가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직면한 당시 국민의 정부는 IMF의 요구를 적극수용하여 긴축적인 재정정책기조와 그에 부응하는 제도개혁을 추진해나갔다. 대표적인 제도개혁으로는 무엇보다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제도'를 도입운영하였으며, 「기금관리기본법」을 제·개정하여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기금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전술한 4대부문 개혁을 뒷받침해나갔다.

그런데 집권 초기 IMF의 요구에 부응한 긴축재정 수행과 더불어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이 증가하고 성장세가 위축되면서 오히려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IMF와 재협상을 통해 적자재정 운영을 요구하고 IMF가 이 요구를 수용하여 적자재정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9년부터 보다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영하면서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된 4대 부문의 개혁을 통해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먼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정책적 지원을 받아가면서 '공적자금'을 만들어 운영하였던 바,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최종적인 지원의 수혜자였던 부실기업으로 하여금 지원의존적인 구제메커니즘에 의지하게 하고 있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존의 「조세감면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그리고 「공업발전법」을 「산

업발전법」으로 바꾸어가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갔던 바, 이 경우에도 해당 기업에 세제상 특혜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결국 지난날 정부 정책에 의한 기업 간 차등적 지원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작동되고 있었다.

요컨대, IMF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지난날 고도성장기 이래 우리사회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었던 지대추구적인 비생산적 축적행태를 지양해내는 수단을 담아내지 않은 채 단순히 외형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립을 강조하면서 맹목적인 시장우선의 개혁과 경제활성화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실제 경제현장에서는 오히려 과거 고도성장기에 명시적으로 취해졌던 차등적·선별적 지원방식과 유사한 지원구조가 작동되게 됨으로써, 오랜 기간 우리기업의 축적행태를 비롯한 경제활동행태에 체화되어 있던 지대추구적인 사회경제틀을 지양해내지 못한채 그 과정은 다시금 후대 정부로 넘어가기에 이르렀다.

(5) '국가운영 틀 전환 시도' 시기

재정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¹²

참여정부는 집권 당시 직면한 사회 제 부문 간의 불균등발전구조의 원인을 과거 정부의 '중앙집권적 불균형국가' 운영 틀에서 찾고 이를 지양해내기 위한 새로운 국가운영의 틀을 '지방분권적 균형국가'로 설정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해나갔다. 그리고 재정정책에서도 그와 같은 새로운 국가운영틀의 구축을 위한 물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게 '분권형 국가재정' 실현을 목표로 소위

12 이하 '국가운영 틀 전환 시도'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에 관한 서술 내용은 필자가 「나라재정」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내용인 바, 구체적인 내용은 우명동(202608)을 참고 바람.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 로드맵에 따라 다양한 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참여 정부는 재정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계획과 예산을 통합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였으며, 기존의 상향식 예산편성이 갖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방식’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위에 국정과제의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먼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지역 주도의 역동적 지역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재정적 지원책을 구상하고 시행해나갔다. 다른 한편, 분권적 국가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세 차례나 인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하기 위해 ‘분권교부세’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방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정책들을 구상하고 수행해나감에 있어서, 해당 정책들이 수행되는 경제현장의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지난 고도성장기 이래로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체화되어 있던 지대추구적인 비생산적 축적행태를 지양해내게 하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담아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참여정부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이 국가운영 틀의 새로운 개조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의욕적으로 다양한 개혁정책을 구상하고 상당 부분 실행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지역 주도의 역동적 지역발전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이면에 사회구성원들의 실제 생활현장에서는 지역간, 그리고

사회 제 계층과 부문 간의 불균등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새로운 국가운영 틀을 구축하고자 하였던 애초의 정책적 의지는 무위로 돌아간 채, 다시금 ‘활기찬 시장경제’를 주요 국정지표로 내세우고 경제성장을 최우선동력으로 인식한 차기정부에 정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재정사 연구의 중요성과 시사점

무릇 특정 시기 재정정책은 해당 시기의 주어진 사회경제구조(실태)를 더 나은 상태로 바꾸고자 하는 당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구상되고 실행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시기의 사회경제구조라는 것은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자리 잡게 된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의 사회경제구조를 더 나은 상태로 바꾸기 위한 재정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이 당시 기업의 축적양식을 비롯하여 경제주체들의 경제생활양식(행태)에 준 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해서 그것을 지양해낼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기업의 축적양식을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생활양식이 해당 사회경제의 구조적 실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정적인 사회경제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 운영 틀을 구상해내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치가나 관료들에게 주어진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득권화되어 있는 특정 시기 기업의 축적양식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경제생활양식을 바꾸어내는 정책 틀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가나 관료들이 기득질서를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하거나, 그들의 의지가 기득질서를 바



꾸는 데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의지가 있더라도 기득질서에 의한 직간접적인 저항으로 기존의 축적들을 지양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정치가나 관료들의 정책적 의지나 노력이 경제현장의 실태를 담아내고 현장에 스며들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보다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다. 지난날의 역사는 그 힘은 아래로부터의 구성원들의 사회적 요구와 의지의 고양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재정제도나 재정정책의 역사적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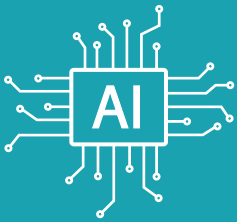
참고 문헌¹³

- “우리나라 ‘회계연도’의 변천·정책과정을 돌아보며”, 『나라재정』 vol. 79, 한국재정정보원, 2023년 7월호.¹⁴
- “우리나라 ‘긴축정책’에 대한 요구와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역사적 시사점”, 『나라재정』 vol. 84, 2023년 12월호
-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역사적 시사점 -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에 의한 제약의 맥락에서 -”, 『나라재정』 vol. 86, 2024년 2월호.
-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후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역사적 시사점(1) - 긴축과 확장 재정정책의 맥락에서 -”, 『나라재정』 vol. 90, 2024년 6월호.
-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후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역사적 시사점(2) - 긴축과 확장 재정정책의 맥락에서 -”, 『나라재정』 vol. 91, 2024년 7월호.
- “1980년대 ‘3저호황’ 전후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역사적 시사점(1)”, 『나라재정』 vol. 94, 2024년 10월호.
- “1980년대 ‘3저호황’ 전후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역사적 시사점(2)”, 『나라재정』 vol. 95, 2024년 11월호.
- “신경제 5개년계획’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역사적 시사점”, 『나라재정』 vol. 112, 2026년 4월호.
- “IMF 경제위기 대응’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역사적 시사점”, 『나라재정』 vol. 114, 2026년 6월호.
- “국가운영 틀 전환 시도’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역사적 시사점”, 『나라재정』 vol. 116, 2026년 8월호.

¹³ 이하 참고문헌은 필자가 『나라재정』에 그동안 기고한 우리나라 재정사 관련 발표문으로 본문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각 시기 『나라재정』에 실린 발표문의 내용은 지면 관계상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축약된 내용으로 게재되어 있는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사한 제목으로 발표한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표논문집에 게재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독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¹⁴ 본 ‘회계연도’ 관련 발표문과 이어지는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발표문은 한국재정정책학회(『한국의 재정정보변천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이전』, 한국재정정보원, 2022)에 실은 필자의 글을 축약해서 발표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전기가 곧 돈이다, 전력의 경제학



AI 시대, 전기를 향한 거대한 식욕

AI에 질문 한 번을 던질 때마다 어느 정도의 전력이 쓰이는지를 단순한 전구 사용시간으로 환산하는 표현은 직관적이지만, 실제 소비량은 모델의 규모, 답변의 길이, 데이터센터의 효율, 전력계통의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있다.

생성형 AI의 확산,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 반도체 미세공정의 고도화, 전기차 충전 확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전력수요의 양과 질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대규모 전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잠깐 전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공장과 서버가 가동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충분한 전력계통 접속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세제 혜택이나 부지 가격만큼이나 ‘전력을 언제, 얼마나, 어떤 신뢰도로 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묻는다. 과거에 시간이 곧 돈이었다면, AI와 첨단산업의 시대에는 전기가 곧 돈이라는 말이 더욱 현실적인 경제 명제가 됐다.

발전소만 늘려서는 안 된다

전력 시스템은 저수지와 도로를 함께 갖춘 도시와 닮았다. 발전소는 물을 채우는 저수지이고, 송전선로와 배전망은 전기를 소비지까지 옮기는 상수도관이자 고속도로다.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관로가 좁거나 도로가 막히면 원하는 곳에 제때 공급할 수 없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발전설비를 확충해도 송전망과 변전설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전기는 발전소 인근에 머무르고 수요가 몰린 산업단지와 도시에는 닿지 못한다.

이 때문에 최근 전력경제의 핵심 병목은 발전량 자체보다 계통 접속과 송전 역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나 데이터센터 단지처럼 특정 지역에 대규모 수요가 집중되면, 해당 지역의 송전선로·변전소·배전설비를 함께 보강해야 한다. 사업자가 전력을 구매할 의사가 있어도 계통이 준비되지 않으면 공장 가동과 서비스 개시가 늦어질 수 있다. 투자자에게는 단순한 전기요금 상승보다 이 접속 지연이 더 큰 비용일 수 있다. 전력은 실시간 균형이 필요한 재화라는 점

AI와 첨단산업의 성장은 전력을 단순한 공공요금 항목이 아니라 산업 입지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바꾸고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전기가 '얼마나 싸가'만이 아니다.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시점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가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의 성패를 가른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에서도 특별하다. 대규모 저장장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전체 계통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수요와 공급을 순간순간 맞춰야 한다.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더 비싼 발전기까지 투입될 수 있고, 이때의 높은 한계비용은 도매가격과 계통 운영비용을 끌어올린다. 24시간 가동되는 데이터센터 수요가 커질수록 평균 수요뿐 아니라 피크 수요의 규모와 지속시간, 지역별 부하 분포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수요 증가가 만드는 경제적 파장

전력수요 증가는 발전사업자에게는 투자 기회이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이 큰 장기투자의 문제다. 발전소나 대규모 저장장치, 송전선로는 막대한 초기자본과 긴 회수기간을 필요로 한다. 수요 전망이 빗나가거나 계통 접속·인허가가 지연되면 투자 위험도 커진다. 계통 운영자와 송배전사업자에게는 설비 보강, 유지보수, 디지털화, 예비력 확보에 따른 총원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가계와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금 부담과 형

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발전·송전·배전 설비에 들어간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세금, 또는 공기업의 재무부담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사회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요금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면 필요한 투자의 재원이 부족해지고, 반대로 단기간에 급격히 올리면 가계의 생활비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 전력 요금은 단순히 킬로와트시당 가격이 아니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보험료이자 미래 산업기반을 위한 투자비라는 성격을 함께 가진다.

요금의 문제는 가격보다 비용 배분이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쟁은 흔히 '올릴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의 선택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질문은 늘어난 계통 비용을 누가, 어떤 원칙으로,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부담할 것인가이다.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나 산업단지가 자신 때문에 발생하는 접속·계통 보강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인자부담 원칙은 형평성 측면에서 설득

<표 1> 전력수요 증가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

주체	전력수요 급증의 직접 효과	핵심 경제적 쟁점
발전사업자	신규 발전·저장설비 투자 수요 확대	장기 수요 전망, 투자비 회수, 연료·탄소 가격 위험
송배전망 사업자	송전선로·변전소·배전망 보강 필요	인허가, 주민 수용성, 투자재원과 비용 배분
첨단산업 기업	전력 조달 가능 시점이 입지 결정의 핵심	접속 지연에 따른 가동·매출 손실, 가격과 신뢰성
가계·중소기업	요금 및 계통투자 비용의 간접 부담	부담의 형평성, 에너지복지, 요금 변동성
정부·지자체	산업 유치와 안정공급의 동시 달성 요구	수요 예측, 입지 유도, 규제·인허가 조정

력이 있다. 많이 이용하는 고객이 추가 설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직관에도 맞는다. 그렇다고 모든 비용을 특정 기업에 한꺼번에 전가하는 방식도 해답은 아니다. 해당 투자가 지역 일자리, 세수, 연관산업, 장기 전력수요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면 공공 인프라로서 계통투자의 편익도 넓게 분포한다. 따라서 비용배분은 ‘원인자’와 ‘수익자’라는 두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직접 접속을 위해 필요한 설비는 사업자의 부담을 높이고, 다수 이용자와 미래 수요자가 함께 쓰는 기간망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식의 구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요금과 계통투자는 분리해서 볼 수 없다. 낮은 요금이 단기적으로는 환영받을 수 있지만, 투자 부족으로 접속 대기과 정전 위험이 늘어나면 산업 전체가 더 큰 기회비용을 치른다. 반대로 지나치게 앞선 투자도 유휴설비와 불필요한 요금 부담을 남길 수 있다. 핵심은 수요 전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단계적으로 투자하며, 비용의 발생과 회수를 투명하게 연결하는 데 있다.

산업경쟁력의 새 기준, 전기 가성비

이제 기업이 평가하는 것은 단순한 전기요금이 아니다. ‘전기 가성비’는 가격, 공급 시점, 신뢰성, 저탄소

성, 계약의 예측 가능성을 함께 뜻한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에 다소 낮더라도 3년 뒤에야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면, 즉시 가동 가능한 다른 지역보다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전력 단가가 다소 높아도 확정된 접속 일정, 높은 공급신뢰도,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을 제공한다면 첨단기업에는 더 가치 있는 입지가 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전력망 투자의 속도는 국가 산업정책의 속도와 같다. 수요가 발생한 뒤에만 대응하는 방식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시간표를 따라가기 어렵다.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자원, 주요 수요지를 함께 고려한 선제적 계통계획이 필요하다. 다만 선제투자는 과잉투자 위험을 동반하므로, 수요 확정에 따라 투자단계를 나누고 사업자에게 명확한 접속 조건과 비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급 확대와 수요 유연성의 병행

전력망 확충이 가장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수도권·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수요지를 연결하는 송전망, 지역별 변전·배전망, 계통 운영을 고도화하는 디지털 인프라가 함께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피크 수요를 송전선로와 발전소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비용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표 2> 첨단산업 관점의 '전기 가성비' 구성요소

평가 요소	기업이 묻는 질문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가격	전력 단가와 변동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운영비와 장기 투자수익성에 영향
속도	필요한 전력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	공장·데이터센터의 가동시점과 매출에 직결
신뢰성	정전·전압품질·예비공급 위험은 관리되는가	생산 차질과 데이터 서비스 중단 위험 축소
청정성	저탄소 전력과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한가	글로벌 공급망·ESG 요구 대응
예측 가능성	접속·요금·규제 조건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가	입지 및 설비투자 의사결정의 불확실성 축소

그래서 수요반응이 중요해진다. 수요반응은 전력이 부족하거나 비싼 시간대에 기업·건물이 사용량을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사용시간을 옮기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예컨대 데이터센터가 작업부하 일부를 시간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냉각·저장설비를 활용해 피크 시간의 부하를 낮출 수 있다면, 가장 비싼 첨두발전기와 일부 망 증설을 대체하거나 늦출 수 있다. 물론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정은 무중단 운영의 제약이 크므로, 일률적 감축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과 생산공정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성 자원을 설계해야 한다.

정책의 방향은 '공급이나 수요관리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다. 발전·저장·송배전망을 적기에 확충하되, 시간대별·지역별 가격신호, 수요반응, 에너지저장장치, 분산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피크를 낮추는 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소비자 부담을 관리하면서도 첨단산업이 요구하는 빠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전력의 청구서는 미래 산업의 투자명세서다

전력수요 급증은 피할 수 없는 비용 증가만을 뜻하지 않는다. 잘 설계하면 전력망과 청정전력 투자는 AI·반도체·전기차·재생에너지 산업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인프라 투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 결정을 미루면 단기 요금은 낮게 보일 수 있어도, 접속 지연·투자 이탈·계통 불안정이라는 더 큰 비용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산업수요와 전원·망 계획을 분리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신규 수요가 촉발하는 비용과 사회 전체가 누리는 편익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비용배분 원칙을 세워야 한다.

셋째, 송배전망 확충과 함께 수요반응·저장·분산 자원을 활용해 가장 비싼 피크 수요를 줄여야 한다. 전기요금 고지서의 숫자 뒤에는 발전소와 송전망의 건설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입지, 지역의 성장 기회, 가계의 부담, 탄소 감축의 속도, 그리고 다음 세대 산업지도가 함께 들어 있다.

'전기가 곧 돈'이라는 말이 위기의 언어에 머물지 않고 기회의 언어가 되려면, 우리는 저수지를 채우는 일과 물길을 넓히는 일, 그리고 그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

영조가 만든 『탁지정례(度支定例)』, 긴축재정의 포문을 열다

대동법 시행 이후 조선왕조는 중앙과 지방에 예산제도를 수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정된 세입으로 다양한 경비지출을 감당해야 했기에, 18세기 전반에 이미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대동사목 반포 당시 예산 기준으로 삼았던 각 관서의 공안(貢案: 공물장부)에 새로운 물종들이 생겨나고, 시중의 공물가 역시 높아지면서, 대동세만으로 중앙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영조는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이 오늘 소개할 『탁지정례(度支定例)』라는 자료이다. 이번 호에서는 영조가 재위 중반 『탁지정례』라는 지출 준거를 마련하게 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호조판서 박문수(朴文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최주희 덕성여자대학교 사학전공 부교수, 역사학자

전례(前例)에서 정례(定例)로, 지출규례를 확립하다

『탁지정례』는 영조 24년(1748)부터 영조 28년(1752)까지 왕실 및 중앙관서의 경비항목을 삭감해 만든 재정 매뉴얼이다. 『탁지정례』의 ‘탁지(度支)’는 재정 관서인 ‘호조(戶曹)’의 별칭으로서,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지출(경비)를 헤아린다’는 뜻이 된다. 국가 경비를 주관하는 관서가 호조이기에 이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정례(定例)’의 경우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정해진 예’라는 뜻이 되는데, 행정 사안마다 국왕의 승인[受敎] 하에 새롭게 정해진 규정을 뜻한다. 조선왕조는 법전에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적용돼 오던 행정 규칙들을 ‘전례(前例)’라는 명칭으로 준수해왔는데, 중간에 폐단이 생기거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논의를 거쳐 이를 ‘식례(式例)’ 혹은 ‘정례(定例)’로 반포하고 후에 법전에 포함시켰다. 요컨대, 『탁지정례』는 각 관서에서 관행적으로 따라

온 지출 전례를 일괄 개선해 만든 지출규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탁지정례』를 단순히 실무 상 참고하는 규정집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영조는 재위 25년(1749) 2월 왕실공상을 정비한 첫 번째 『탁지정례』를 간행하면서, 『탁지정례』를 『속오례의』, 『속대전』과 함께 거론하며, ‘의(儀)·전(典)·례(例)’가 갖추어졌다고 평가하였다. 조정의 신료들 역시 『속오례의』, 『속대전』, 『탁지정례』가 모두 완성되면 나랏일이 남김없이 정돈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이처럼 『탁지정례』는 조선후기 예치와 법치의 근간이 되는 『속오례의』, 『속대전』과 함께 거론될 만큼, 국가운영의 핵심 규례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왕실 유모에게까지 지출 품목이 정해지다

그러면 『탁지정례』에는 실제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 『탁지정례』는 한 책이 아니라 ①『각전각궁

례(各殿各宮例)』 6권, ②『국혼정례(國婚定例)』 2권, ③『각사정례(各司定例)』 12권, ④『상방정례(尙方定例)』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①『각전각궁례』와 ③『각사정례』는 모두 표제가 『탁지정례』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왕실과 정부관서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②『국혼정례』와 ④『상방정례』는 표제에 『탁지정례』라 쓰지 않았지만, 모두 『탁지정례』의 일종으로 왕실 경비를 삭감하기 위해 간행된 정례서들이다. 이밖에 영조 27년(1751) 11월 효장세자의 부인인 효순현빈이 죽고, 이듬해(1752) 3월 의소 세손이 죽자, 영조가 상례 절차와 물품을 정비해 만든 ⑤『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역시 『탁지정례』에 속하는 예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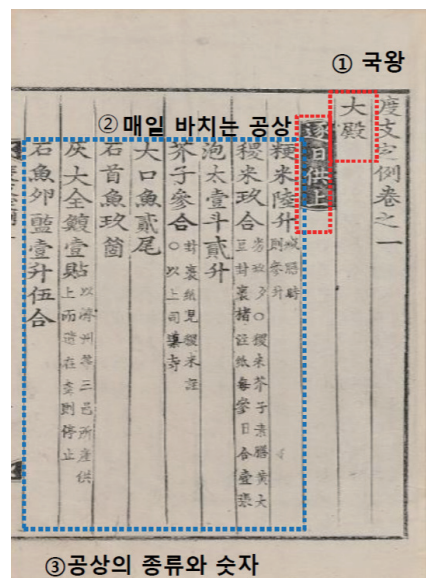
영조는 자신이 아끼던 며느리와 세손의 상에도 이처럼 사치스런 의례를 경계하는 서적을 간행했다. 각 정례서의 성격을 살펴보면, ①과 ③은 왕실 및 정부관서의 ‘일반경상비’에 해당하며, ②는 왕실의례와 관련된 ‘특별경상비’에 해당한다. ④는 일상적인 법복과 왕실의례에 착용하는 의복, 장신구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일반경상비와 특수경상비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이들 모두 왕실에 진배하는 공상(供上: 왕실에 올리는 것가지 물품)을 정비한 것으로, 왕실가족이 먹고 쓰는 일상 물품을 비롯해 각종 의례 시 소비하는 물품 목록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각전각궁례』에는 국왕과 자전(대비), 중궁·후궁, 세자·세손, 대군·왕자, 공주·옹주를 비롯해 왕실 유모인 봉보부인(奉保夫人)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공상이 제시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에는 단지 왕실 가족이 먹고 쓰는 물품만이 아니라 궁녀들에게 지급되는 식비와 의복비도 함께 수록되어 있는 점이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에서, 왕이 남긴 밥상을 궁녀들이 나눠 먹는

〈그림 1〉 『탁지정례(度支定例)』 권1 표지(174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그림 2〉 『탁지정례(度支定例)』 권1(각전각궁례) 내지(1749)
『탁지정례』(『각전각궁례』)에는 대전에서부터 왕실유모에 이르기까지 각전, 각궁에 제공되는 공상의 종류와 숫자, 조달 관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장면이 나오는데, 실상은 궁녀들에게 정기적인 식비와 의복비가 따로 지급되고 있었다. 『탁지정례』에서 관련 항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군·왕자와 공주·옹주의 경우, 일정 나이가 되면 가례(嘉禮: 왕실 혼례를 높여 부르는 말)를 치르고 곁에서 나가 살아야 하는데[出閣], 이때 지급하는 물품도 자세히 기재해 놓았다.

정부관서의 일반경상비를 엿볼 수 있는 ③『각사정례』에는 대략 125처의 공상물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 관서의 업무 시 수반되는 경비물자가 나열되어 있다. 왕실과 관련된 공상은 왕실의 수장인 국왕 영조가 일일이 삭감함으로써 내부 반발이 나오지 않았지만, 130여 개 관서의 경비 물품을 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내부 반발이 야기되었다.

당시 『각사정례』의 편찬을 맡았던 호조판서 박문수(朴文秀)는 영조가 『각사정례』의 작업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하문할 때마다 “수년 간의 등록을 살펴보고 계산하여 마련하기 때문에 일을 선불리 마칠 수 없다.”고 하였다. 관행적으로 써 온 경비를 삭감하는 작업은 그만큼 지난하고 고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박문수는 영조의 뜻에 따라 정례서 편찬에 최선을 다했으나, 조재호와의 갈등으로 충주목사겸 어염사에 좌천되면서 한동안 동력을 잃게 되었다. 실제로 현존하는 『각사정례』에는 정부관서가 일부 빠져 있다. 영조는 이를 방관하지 않고 김상성(金尙星)을 호조판서로 임명해 정례서 작업을 끝까지 밀어부쳤으며, 결국 12권에 달하는 『각사정례』를 간행했다. 그러면 영조는 왜 이렇게까지 왕실과 정부관서의 경비를 줄이고자 노력한 것일까?

어의(御衣)까지 빨아 입는 영조의 검약 벽(癖)

영조의 검약 벽은 당시 세간에도 꽤 유명했던 것 같다. 영조 7년(1731)과 8년(1732)은 영조의 재위 기간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기근이 초래됐던 해이다. 두 해에 걸친 기근으로 삼남의 백성 가운데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하자, 영조는 내탕고(內帑庫: 왕의 사적 금고)를 열어 진휼에 보태는 한편, 요역(徭役: 군역 이외의 각종 공역)을 덜어주고 환곡을 갚는 일도 중지시켰다.

그럼에도 영조 8년(1732) 12월, 강진현에 사람을 삶아 먹는, 소위 ‘인상식(人相食)’이라는 변고가 조정 에 보고되었다. 전라감사 유엄의 장계(狀啓: 조정에 올리는 행정보고서)를 통해 이 상황을 미리 접한 승정원 관원들은 서로 쳐다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한참을 지나서도 밥상의 숟가락을 들 수 없었다는 소회를 영조에게 아뢰었다. 영조는 감진어사를 호남에 보내 특별히 굶주린 백성을 위로하고 진휼을 주관토록 했는데, 당시 감진어사로 파견된 이광덕은 영조에게, 백성들 사이에 “우리 임금은 어의에 능라(綾羅: 비단의 일종)를 쓰지 않고 창호에 떨어진 곳이 있어도 풀로 덧붙이신다.”는 말이 돈다고 했다.¹ 정조 역시 재위 6년(1782) 자신의 할아버지인 영조의 신주를 세실(世室: 신주를 옮기지 않고 대대로 두어 제사를 지내는 종묘 정전)에 안치하면서 “선왕께서는 의복을 세 번이나 빨아 입어 바꾸지 않으셨으며, 궁궐은 서까래 하나도 더 없지 않으셨다. 무늬 있는 비단을 금하여 육궁(六宮)의 옷소매가 길어지지 않았고, 여인들의 머리 장식을 단속하여 머리채가 높아지지 않았다. 이는 선왕께서 보이신 검

1 『승정원일기』 753책, 영조 8년 12월 22일(을해).

소함이었다.”라는 내용의 윤음을 내렸다.² 그렇다고 해서 영조가 몸소 검약을 실천하는 것만을 미덕으로 여겼던 것은 아니다.

영조 역시 번잡한 전례를 따르면서 경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고 감진어사 이광덕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이광덕은 영조에게, “지금 몸소 검약을 행하시지만, 번잡하고 그릇된 전례에서 벗어나지 못해 백성은 곤궁해지고 재화는 고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대동법을 시행한 후로 나라를 운영해 온 지 오래인데, 그사이 온갖 일이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재해를 입어 세입이 줄어도 지출은 변함이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광덕이 언급한 경비 지출 요인은 그로부터 16년 후인 영조 24년(1748) 『탁지정례』가 간행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영조는 검약을 숭선하고 대외에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비 지출의 번잡한 전례를 정비해 정례화하는 작업을 단행했다. 그런데 『탁지정례』가 간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또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정부관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조가 끝까지 정례서의 간행을 마무리 지은 데에는 감필급대(減匹給代: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 거두고 부족한 군문의 군포 수입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 즉 ‘균역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왕실재정을 줄여 균역법을 관철시키다

영조 25년(1749) 『각전각공례』를 간행한 영조는 이듬해(1750) 왕실 재정을 줄이는 정례서 하나를 더 작성했다. 이것이 『선혜청정례(宣惠廳定例)』이다.

『선혜청정례』에도 왕실 가족에게 제공되는 정기적인 공상 물품이 망라되어 있다. 그러면 『각전각공례』와 『선혜청정례』는 무엇이 다를까. 『선혜청정례』는 주로 경기감영의 진상물이나, 공계인들이 궐에 직접 바치는 물종들로 채워져 있다.

예컨대, 『선혜청정례』에는 『각전각공례』에는 없는 땀감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기인(其人)이라는 전문화된 공계인들이 바치는 품목이었다. 이밖에도 어부공인, 응사공인, 구피계공인들이 선혜청에서 직접 공물가를 받고 품질 좋은 어물이나 꿩, 가죽 등을 왕실에 진배했다. 결국 『선혜청정례』는 호조의 속사인 공상아문을 통하지 않고, 왕실에 직접 바치는 품질 좋은 물품들을 다시 한번 삭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영조는 왜 왕실 공상을 다시 한번 줄인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선혜청정례』의 서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군왕이 절용하지 않고 단지 아래에만 행하라고 하는데, 만약 이와 같으면 단지 균역을 위해 일마다 절감하고, 지난 날 우리 자성께서 전일의 성덕을 본받아 여러 공헌(貢獻)을 절성한 뜻이 아니다. 많은 부고의 재화는 모두 국가의 재원이니 어찌 그 명분에 구애받겠는가. 탁지는 여유가 있으니 스스로 감포(減布)를 대신할 재원을 보충할 수 있고, 선혜청도 여유가 있으니 감포를 대신할 재원을 보충할 수 있다.³

인용문에서 보듯이 영조는 『선혜청정례』의 서문에 뜬금없이 ‘균역’과 ‘감포’에 대한 생각을 적어 놓았다. 국왕이 먼저 절용하지 않으면서 여러 군문의 군

² 『정조실록』 권14, 정조 6년 11월 27일(경신).

³ 『宣惠廳定例』御製宣惠廳定例 卷題.

포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명한다면 당연히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기에, 국왕이 술선해서 왕실재정을 줄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혜청정례』는 영조가 군포 수취를 2필에서 1필로 줄이도록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난 영조 26년(1750) 8월에 초본이 작성되었으며, 이듬해(1751) 최종 완성되었다. 영조는 왕실재정을 두 번이나 삭감함으로써, 군포 수취의 고질적인 폐단을 개혁하는 명분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왕조는 수도 방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훈련도감을 비롯한 어영청, 금위영, 총융청, 수어청 등의 군문을 신설하였다. 이로 인해 각 군문에서 산발적으로 거두는 군포 수가 늘어나, 민간에서는 양인 장정 한 사람에게 군포가 이중으로 부과되는가 하면, 갓난아기나 이미 사망한 자에 이르기까지 군포가 부과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17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해결책이 모색되었으나, 이미 균역을 면한 양반 사족 및 유생들의 반발로 군포 수취 범위를 확대하고, 무분별한 군포 수취를 근절하는 방안이 하나로 정리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조는 재위 26년(1750)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감필급대를 먼저 선포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지방관아의 숨겨둔 토지와 왕실의 어염세를 조사해 각 군문의 줄어든 수입을 보전해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이 영조가 추진한 균역법의 핵심 골자이다.

영조가 재위 중반 어렵게 간행한 『탁지정례』와 『선혜청정례』는 결국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왕실에서부터 스스로 경비 삭감의 모범을 보인 조치였다. 오늘날 영조를 성군(聖君)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그가 남긴 여러 제도와 정책들에서 손상익하(損上益下)의 면모를 엿볼 수 있기 때

문일 것이다. 문제는 왕실과 정부관서의 경비를 줄여놓은 정례서가 고종대까지 지출준거로 계속 활용됨으로써 재정운영 상 긴축재정의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정례에 맞춰 국가경비를 타이트하게 집행하는 관행이 조선말기까지 이어지면서 중앙정부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비하는 내적 역량을 갖추는 데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18세기 중반 영조가 수립한 재정전략은 19세기 후반 들어 근대 개혁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3〉 박문수(朴文秀) 초상
오늘날 암행어사로 많이 알려진 박문수는, 영조대 중반 호조판서에 제수되어 『탁지정례』(각사정례)의 간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균역법 시행을 위한 기초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진 출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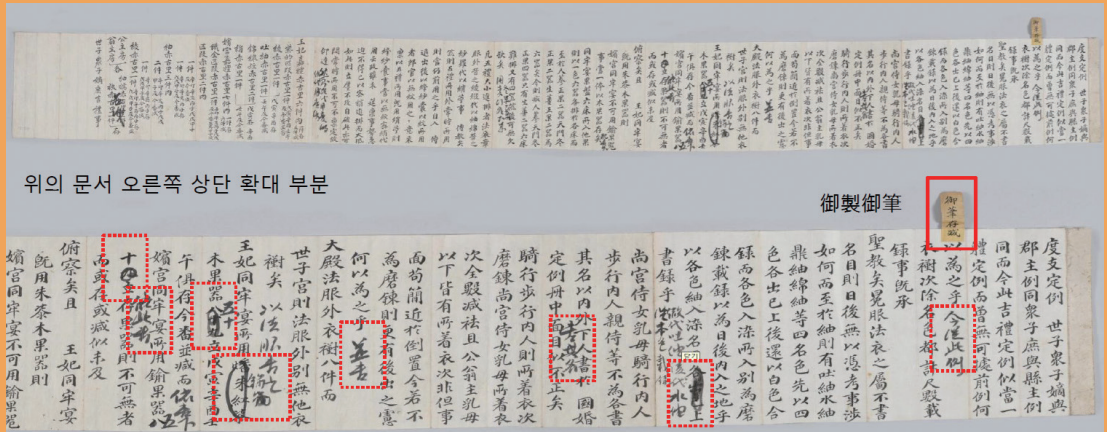


<그림 4> 『탁지정례국혼정례가감문(度支定例國婚定例加減文)』(1749)

영조가 『탁지정례』와 『국혼정례』에 들어가는 항목을 일일이 검토, 첨삭한 문서이다.

빨간색 박스는 영조가 직접 수정한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위의 문서 오른쪽 상단 확대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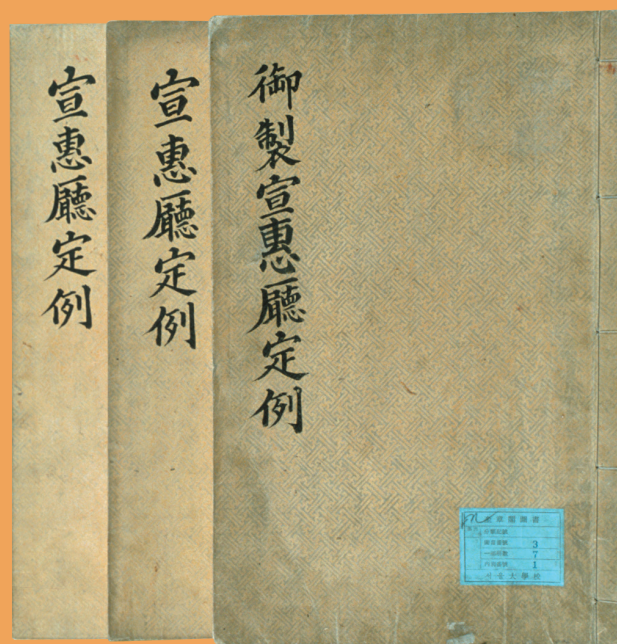
御製御筆

<그림 5> 『선혜청정례』(1751년에는 내용이 완성되었고, 간행은 이듬해 이뤄진 것으로 보임)

영조는 재위 중반 균역법을 관찰시키기 위해 왕실공상을 줄이는 정례서를

추가로 작업했는데, 이것이 바로 『선혜청정례』이다.

(사진 출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재 이시영, 독립운동 자금조달과 배분 나라 없는 시대의 국가재정과 운영

독립운동에도 살림이 필요했다. 정부를 유지하고 독립운동가를 지원하며 외교와 군사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세금을 거둘 영토도, 국민에게 세금을 강제할 권한도 없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독립을 향한 국민의 믿음과 희생이었다. 자신의 가산을 처분해 독립운동에 바친 성재 이시영은 그 한가운데에서 임시정부의 재정을 책임졌다. 나라를 잃은 시대에 어떻게 국가의 살림을 꾸려갔는지, 그 경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살펴본다.

정경환 동의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정치철학

이름	이시영(李始榮)
호	성재(省齋)·시림산인(始林山人)
생몰연도	1869년 12월 3일~ 1953년 4월 17일(84세)
국적	대한민국
활동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주요 사건	일제강점기 때, 가산을 처분해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신민회, 신흥강습소, 한국독립당 등을 조직하였고, 해방 이후, 초대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여 사임한 정치인·독립운동가
본관	경주(慶州)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생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그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 시민 김○현 -



남산 동상 6인,
온라인 추모관 바로가기
위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서언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유사 이래 끊임없는 외세의 침범을 받아왔다. 부당한 외세의 침략에 대해 우리 민족은 끈질기게 저항해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왔다. 여전히 분단 상황 속에서 민족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 국민은 좁은 국토에서도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제조 강국을 일구어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국선열이 민족의 제단에 피를 뿌렸는가. 이루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애국선열의 희생이 있었다.

성재 이시영(1869-1953)은 한말부터 대한민국 건국 이후까지 오롯이 민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부통령 시절 지근 거리에서 비서직을 수행하며 선생을 모셨던 박창화는 성재 이시영에 대해 “오직 우국애민하는 마음으로 추호의 사심이나 불의를 용납지 않는 대쪽 같은 선비정신”¹을 지닌 참된 애국자로 평가하였다.

조선의 대표적인 명문가 후손으로 성장한 성재는 한말 을사늑약이 체결될 당시 외부 교섭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을사늑약 체결에 가담한 박제순 외부대신을 단호하게 질타하고 관계를 절연하였다. 이후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게 되자 집안의 막대한 재산을 비밀리에 처분하고, 1910년 12월 6형제와 가솔 60여 명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중국 남만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흥강습소를 세워 훗날 신흥무관학교로 발전시켰으며, 수많은 독립군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후 성재는 언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질곡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1945년 광복이 되었을 때, 우국충정의 단심(丹心)으로 함께 망명했던 6형제 가운데 오직 성재만 살아남아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35년 전 6형제가 함께 망명했지만 광복된 조국의 땅을 다시 밟은 이는 성재 한 사람뿐이었다. 오직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역만리 타국에서 굶주림과 병고 속에, 또는 일제의 고문과 탄압 속에 생을 마감한 형제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뿐이다.

이시영 6형제와 그 가족들의 자기희생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즉 사회지도층이 공동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정신의 표상으로 우리 역사에 길이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정신과 의지만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 독립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필요했다. 영토도 없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조세권도 없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정부 조직을 유지하고 외교활동과 군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는가?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정부를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했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재정은 단순한 세입과 세출의 문제가 아니라, 국

1 박창화, 『성재 이시영 소전(小傳)』(서울: 을유문화사, 1984), p.133.

민의 자발적 헌신과 독립에 대한 신념 위에서 유지된 ‘나라 없는 시대의 국가재정’이었다. 성재는 망명 기간 동안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법무 총장을 맡았고, 같은 해 9월 11일 통합 임시정부 출범 이후 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나라 없는 시대의 국가재정을 직접 책임졌다. 그는 국가의 영토와 안정적인 조세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 조직의 존속을 위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았다.

본고에서는 먼저 2장에서 성재 이시영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구국 투쟁을 살펴보고, 그의 삶과 실천 속에서 드러나는 정치사상을 민권자유론, 멸사봉공론, 대의실천론, 진중보국론, 민족주체론, 자유민주통일론이라는 여섯 가지 범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어 3장에서는 본고의 핵심 주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조달과 배분, 그리고 재정 운영의 실재를 살펴보고, 마지막 4장에서는 이 같은 임시정부 재정 운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재정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성재 이시영의 삶과 그의 정치사상

성재 이시영은 한국 역사상 최고의 격동기였던 한말에 태어나 조국의 독립과 건국,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민족선각자이자 애국자이다. 그는 일생 곧고 청렴결백하였으며 인화를 통한 단결을 추구한 조화로운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의 삶은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일생 개인의 안위와 행복, 영달보다는 조국과 민족을 우선하여 행동한 실천인이었다. 첫 번째 시기는 출생한 1869년부터 망명하기 전인 1910년까지로, 구국 투쟁기로 규정할 수 있다. 조선의 명재상 백사 이항복의 후손으로 부친 이유승은 이조판서와 우찬성을 지냈다. 이시영 자신도 젊은 시절 관직에 진출하여 홍문관 교리, 승정원 부승지, 한성재판소장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당시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만을 생각한다면 누구보다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두 번째 시기는 망명한 1910년부터 환국한 1945년까지로, 독립투쟁기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과 임시의정원 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임시정부를 끝까지 고수하였고, 광복되는 그날까지 초지일관 조국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에 전념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환국한 1945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까지로, 반탁 및 건국투쟁기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 그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바탕으로 반탁운동을 전개하였고, 남한 단독선거와 정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마지막 시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부터 타계한 1953년까지로, 자유민권투쟁기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 그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힘썼다.

그가 부통령직을 전격 사퇴하고 제2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은, 이승만 정부의 파행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행태에 대한 비판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재는 자신의 사상, 특

히 정치사상을²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남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일생은 정치와 독립운동의 현장을 떠나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가 남긴 저술과 담화문, 성명서 등에는 국가와 민족, 자유와 민권, 민주주의에 대한 일관된 문제의식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성재의 사상은 정치사상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의 정치사상은 민권자유론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는 1952년 7월 27일 대통령 입후보자 출마 성명에서 “본인이 동지 여러분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선거에 입후보를 당하여 한 마디 국내외 동포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내가 목적으로 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하나입니다. 그것은 특권정치를 부인하고 민주정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라고³ 밝히 민권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를 주창하였다.⁴

둘째, 그의 정치사상은 멸사봉공론(滅私奉公論)으로 규정할 수 있다. 성재는 말로만 자신의 사상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를 직접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참된 사상의 구현자이자 실천자였다. 개인과 가족의 막대한 재산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행위 자체가 사적 이익을 버리고 공적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멸사봉공의 실천이었다.

셋째는 대의실천론이다. 그는 일생 민족과 국가라는 대의(大義)의 관점에서 행동하였다. 특히 “공무를 다룸에는 철저히 사심(私心)을 버리고 오직 봉공(奉公)에 열과 성을 다했다”라고⁵ 한 성재의 비서 박창화의 증언은 그가 대의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가 임시정부를 끝까지 고수하였고, 광복 이후 오랜 세월 함께해 온 김구의 노선에서 벗어나 남한 단독정부 수립 노선을 지지한 것도 국가와 민족의 장래라는 대의를 우선한 정치적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그의 정치사상은 목숨을 다해 국가와 민족을 수호해야 한다는 진충보국론, 일제의 식민사관을 강력히 비판하고 우리 민족이 역사의 주체임을 강조한 민족주체론,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민족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자유민주통일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약술하도록 하겠다.

성재 이시영이 생각한 국가재정

① 민권자유

국민은 국가의 객체가 아니라 국가의 주체 자발적으로 세금과 독립운동 자금을 부담하며 자신들의 정부를 스스로 떠받쳤다.

② 멸사봉공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대의 이시영의 가산 처분에서부터 국민의 애국금의연금까지 이어진 희생.

③ 대의실천

독립이라는 뜻을 실제 행동과 재정으로 전환 독립공제를 사고, 돈을 내고, 정부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2 성재의 사상은 궁극적으로 정치사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는 일생 정치의 현장에서 활동했고 그의 언사는 대부분 정치에 대한 자신의 사고체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의 사상은 정치사상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3 『경향신문』, 1952년 7월 30일자. '정부통령 입후보자, 출마의 변 발표' 중.

4 대통령 출마성명에서 밝힌 정책 개요 제1항에도 그의 민권자유론의 사상이 적시되어 있다. 즉 “초법(超法) 특권정치를 부인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환경에서 진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를 확립한다.” 박창화, 앞의 책, p.138.

5 위의 책, p.94.

나라 없는 시대의 국가재정과 그 운영

앞에서 살펴본 성재 이시영의 정치사상은 관념적 주장에 머문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과 국가 운영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 운영은 그의 민권자유론, 멸사봉공론, 대의실천론이 실제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임시정부의 재정은 성재의 민권자유론과 연결된다. 국가재정은 본래 국민의 부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당시 임시정부는 영토도 없었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현실적인 통치권도 없었다. 그럼에도 인구세를 비롯하여 애국금, 의연금, 독립공채 등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국민이 임시정부를 자신의 정부로 인정하고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재정적 책임을 분담한 것이었다.

성재가 주장한 민권자유론은 국민을 국가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바라보는 데 그 핵심이 있다.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인 동시에 국가공동체를 유지할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임시정부의 재정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민권의 또 다른 실천형태로 볼 수 있다. 국민이 돈을 낸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자신의 정부를 스스로 떠받치는 정치적 행위였다.

둘째, 임시정부 재정은 성재의 멸사봉공론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성재 자신이 경술국치 이후 형제들과 함께 막대한 가산을 처분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은 사적 재산을 버리고 공적 대의를 선택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임시정부의 재정 역시 이와 같은 국민적 희생 위에서 유지되었다. 국내외의 수많은 국민과 해외동포들이 자신의 생활비와 재산 일부를 애국금과 의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

이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내놓는 행위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목적을 앞세운 행위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임시정부의 재정은 국민 개개인의 멸사봉공이 모여 만들어진 국가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재 개인의 삶에서 나타난 멸사봉공의 정신이 임시정부의 재정 운영에서는 국민적 실천으로 확대된 것이다.

셋째, 임시정부의 재정은 대의실천론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독립은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대의였지만, 그 대의가 현실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 행동이 필요했다. 독립공채의 발행과 구입은 이를 잘 보여준다. 언제 독립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독립공채를 구입한다는 것은 장래 독립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행위였다.

이는 단순한 금융 행위가 아니라 독립이라는 대의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다. 아무리 숭고한 명분이라 하더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현실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국민과 해외동포들이 실제로 돈을 내고 독립공채를 구입함으로써 독립이라는 대의를 현실의 힘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임시정부의 재정은 성재의 대의실천론이 집단적 차원에서 구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재는 통합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을 맡아 이처럼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책임

을 졌다. 국내외에서 모인 자금을 정부재정으로 통합하고, 한정된 재원을 정부 조직의 유지와 외교·군사·선전 활동 등에 배분해야 했다. 재정의 일원화는 단순한 회계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분산된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의 정부 아래 결집시키는 국가 운영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재의 진충보국론과 민족 주체론도 함께 나타난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진충보국이었고, 우리 국민 스스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여 정부를 유지한 것은 민족주체성의 실천이었다. 또한,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적 재정 운영은 훗날 성재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과도 일정한 연속성을 갖는다.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은 단순한 세입과 세출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 그리고 독립이라는 대의를 실천하는 힘으로 유지된 ‘나라 없는 시대의 국가재정’이었다. 그리고 그 재정의 한가운데에는 민권자유, 멸사봉공, 대의실천을 일생의 정치적 신념으로 삼았던 성재 이시영의 사상과 삶이 자리하고 있었다.

맺음말 - 현대적 의미

성재 이시영의 삶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 운영은 오늘날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첫째, 국가재정은 단순히 돈을 거두고 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임시정부는 강제적인 조세권도 안정적인 재원도 없었지만, 국민의 자발적인 헌신과 신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다.

둘째, 재정은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희생을 필요로 한다. 성재가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듯이, 수많은 국민과 해외동포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놓았다. 이러한 멸사봉공과 대의실천의 정신이 임시정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셋째, 국가재정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성재가 강조한 민권과 자유의 정신 역시 국가 운영과 재정 운영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에 있음을 보여준다.

나라 없는 시대에도 국민의 신뢰와 헌신으로 국가재정을 만들어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험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고, 국가가 그 재정을 공정하고 책임 있게 운용할 때 비로소 건강한 국가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이 성재 이시영과 임시정부의 재정 운영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다.

내일을 여는 혁신, 삶을 지키는 재정 “2027년 예산안으로 살펴보는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의 방향”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작동 방식을 통해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를
만드는 투자와 선택을
살펴보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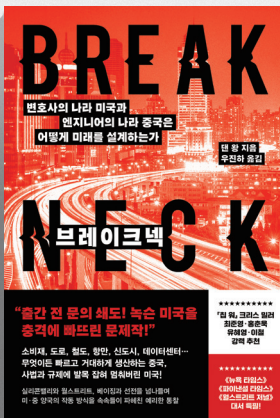
『브레이크넥』

댄 왕 저 | 우진하 역 | 웅진지식하우스(2026)

미국과 중국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미국을 규제와 절차에 가로막혀 제조 역량과 기반시설이 약화된 ‘변호사의 나라’, 중국을 빠른 의사결정과 강력한 생산·건설 역량을 갖춘 ‘엔지니어의 나라’로 대비한다.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 중국의 대도시와 지역을 넘나들며 두 나라의 산업과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본다. 소비재와 도로, 철도, 항만, 신도시 등 물리적 산업 기반을 비교하며 국가의 생산 역량이 경제의 역동성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본다. 특히 제조업과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선택이 경제적 역동성과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국가 반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포인트

- **미국과 중국, 다른 국가의 작동 방식:** 규제와 절차, 기술과 생산 역량을 중심으로 두 나라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한다.
- **제조업과 인프라의 힘:** 산업 생산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의 역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 **국가의 반영을 만드는 선택:**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산업과 투자,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9월호에서는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방향을 살펴본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AI·첨단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민의 삶과 맞닿은 과제에도 대응하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정부와 재정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성장과 분배, 혁신과 민생의 균형을 폭넓게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될 두 권의 도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술공화국 선언』

알렉스 C. 카프·니콜라스 W. 자미스카 저 | 빅데이터닥터 역 | 지식노마드(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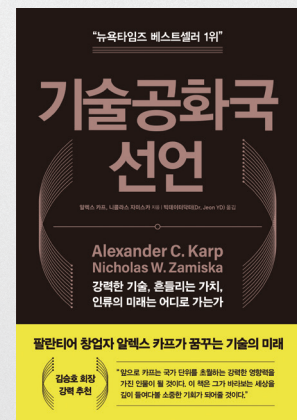
미국의 힘을 이끌어온 기술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야망을 잃으면서 사회와 국가의 역동성도 약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과거 국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던 기술이 소비자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약화됐으며, 특히 AI와 같은 범용 기술은 단순한 편의와 생산성 향상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기술산업과 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적 목표를 위한 기술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술산업이 국가와 사회의 바깥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국방·교육 등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기술과 공공성의 결합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이 책은

기술을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며,
기술산업과 정부가
미래사회와 국가의 공공적 가치를 위한 역할을
고민하는 책

기술혁신과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

- **기술은 국가의 전략 자산:**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음을 짚어본다.
- **기술과 공공의 가치:** 기술이 기업의 이익을 넘어 의료·국방·교육 등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정부와 기술산업의 새로운 관계:** 기술산업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복하고 미래를 위한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2026 September vol. 117

한국재정정보원, ‘2026년 통합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 이하 '재정원')은 8월 20일(목) 본원에서 '2026년 통합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가정한 재해 상황을 바탕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토론훈련과 백업시스템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재해 발생 시 상황별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훈련에서는 재해 상황별 대응절차와 담당자별 역할을 확인하고, 백업시스템 기동훈련에서는 백업시스템의 가동 여부와 복구절차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실제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가 신속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재정원은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반영하고, 백업시스템의 가동 여부와 재해복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과 업무 연속성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NEWS

2026 September vol. 117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 이하 '재정원')은 8월 25일(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재정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최종 발표회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기획예산처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경진대회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실시된 집합 교육을 받은 후, 재정 분석 전문가의 비대면 지도를 통해 정책 제안을 구체화했다.

최종 발표회에서는 9개 팀이 공공 문제 해결 방안과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뒤 심사위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대상인 기획예산처 장관상은 청년 대상 국고보조금 공모 자료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유체도' 팀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인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상은 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성과지표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 'Voice2Policy' 팀이 수상했다.

애독자 코너

• 2026.09 •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나라재정』은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WOW



찾아라~~ 한국재정정보원 숨은 정보

Q. 2027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로 '**00000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00000는 무엇일까요?

- ① 과거만족형 ② 성장주도형
- ③ 소비중심형 ④ 자원고갈형



힌트!

우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과 관련된 힌트를 찾아보세요.

우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을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2026.9.28. ~ 10.15.

★ 지난해 정답: ④ 온실가스감축인지

★ 지난해 퀴즈 당첨자

010-****-4135	010-****-8759	
010-****-3927	010-****-1907	010-****-1692



Q ♥

#나라재정#dBrain*

응모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월간『나라재정』에

숨겨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애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구독 정보 변경 및 기타 월간『나라재정』과 관련한 궁금증은 02-6908-8632로 문의 바랍니다.

제18회

강릉커피축제

GANGNEUNG COFFEE FESTIVAL

2026.10.21.수

— 10.25.일

강릉커피거리 및

강릉시 일원

커피로 가득한 강릉



Gangneung
Coffee Festival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GANGNEUNG CITY

재단 강릉문화재단
Gangneung Culture & Arts Foundation

세계 한인 주간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열어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2026. 9.27 SUN - 10.1 THU
INCHEON, KOREA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